



산업연구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공동정책포럼

트럼프 2기, 대한민국 산업 정책 및 인재 정책을 그리다

2025. 3. 25.(화)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산업연구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공동정책포럼

트럼프 2기, 대한민국 산업 정책 및 인재 정책을 그리다

2025. 3. 25.(화) 14:00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시 간	내 용
14:00~14:20	개 회 국민의례 개회사 고혜원 원장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환영사 권남훈 원장 (산업연구원) 축 사 권기섭 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신동천 이사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4:20~15:35	제1부 발표 기조강연 한국자본주의 유형론과 적극적 노동시장 및 인력 정책 이 근 학회장 (한국경제학회) 발표 1 트럼프 2기 통상·산업 정책이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양주영 실장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 발표 2 트럼프 정부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와 인력수요 전환 쟁점 길은선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인구감소·고령화대응연구실) 발표 3 AI와의 공존을 위한 교육 전환 윤혜준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재역량연구센터) 발표 4 트럼프 2기, 노동시장 및 인재정책 대응 전략 김철희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고용능력연구본부)
15:50~17:30	제2부 토론 좌 장 이원덕 노사공포럼 상임대표 (前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 토 론 임영미 국장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강감찬 국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노용식 부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부) 최성호 교수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김태황 교수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김영식 교수 (부산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전정호 교수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질의응답
17:30	폐 회

※ 위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2기, 대한민국 산업 정책 및 인재 정책을 그리다

기조강연

한국자본주의 유형론과 적극적 노동시장 및 인력 정책

1

이 군 학회장 (한국경제학회)

발표 1

트럼프 2기 통상·산업 정책이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17

양주영 실장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

발표 2

트럼프 정부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와 인력수요 전환 쟁점

29

길은선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인구감소·고령화대응연구실)

발표 3

AI와의 공존을 위한 교육 전환

45

윤혜준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재역량연구센터)

발표 4

트럼프 2기, 노동시장 및 인재정책 대응 전략

59

김철희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고용능력연구본부)

트럼프 2기,
대한민국 산업 정책 및 인재 정책을 그리다

기조강연

**한국자본주의 유형론과
적극적 노동시장 및 인력 정책**

이 근 학회장
(한국경제학회)

한국자본주의 유형론과 적극적 노동시장 및 인력 정책

이근 (www.keunlee.com)

한국경제학회 회장;
석좌교수, 중앙대학교;서울대학교
(사) 경제추격연구소 이사장;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1

트럼프 2.0의 의미:

탈세계화에서 글로벌 자유주의의 종언

2

탈세계화 Series of Events for De-Globalization

- 1) the 2008-09 global financial crisis (GFC) : a blow to financial globalisation
- 2) 2016: Brexit
- 3) 2019: US-China trade war: setback against trade globalisation
- 4) 2020: The pandemic is the final blow to production globalisation or over-fragmented GVC;
-- Multilateral Free Trade → A small-number alliance based GVC
- 5) 2021 G7 Cornwall Consensus: 글로벌 최저 법인세 + 디지털세
미국이 주장하는 법인세의 글로벌 공조를 유럽이 받아들이고,
유럽이 주장하는 디지털세를 미국이 받아들이는 타협
→ 중국이라는 공통의 경쟁상대를 의식;
-- 이전의 자유방임 세계화 = 가장 싼 곳에서 생산하여, 가장 세율이 낮은 곳에서 세금 납부;
-- 자본이동에 대한 견제; 조세 수입으로 코로나 피해보상과 GVC 재편 비용을 조달하는 구조
- 6) Russia-Ukraine War: De-globalization of Agricultural goods, 국제결제망 (탈 달러)

트럼프 2기 시대

■ 트럼프 2기 집권의 의미

- 트럼프의 대통령 재선은 8년전 그의 당선이 미국 정치의 일시적 일탈이 아니라 새로운 추세의 일환임을 의미
- 트럼프 1기가 탈세계화 시대를 열었다면
트럼프 2기는 탈세계화에 더해 글로벌 자유주의의 종언을 의미
- 바이든은 다양성, 포용성, 공정성 등 소위 정치적으로 올바른 (politically correct) 가치 중심의 자유주의 질서를 재건 시도 ; 미국시민들에 의해 거부 당함
- 즉, 경제적 자유주의는 중국만 덕 보게 하여 미국은 러스트 벨트화 하고, 성적 인종적 소수성에 대한 고려 덕에 미국 전통사회와 가치는 무너지고 있다는 인식 팽배

한국: 미중 사이 낀 구도 -> 미, 중 각각 대처해야 하는 구도

■ 한국의 입장에서 본 현 상황에 대한 판단

- 미중 사이에 끼여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라는 이해 득실을 따지는 구도 속에서, 미국 및 중국을 각각 대응하여야 하는 구도로 전환
- 미국 쇼크 (미국발 공동화):
 - 미국내 공장 완성으로 관세에 대한 대응은 가능하나
 - 대미 흑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 물량늘리고, 한국산 물량을 축소해야
 - 이는 국내산 물량 주문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산업 공동화
- 중국 쇼크 (중국발 공동화)
 - 중국의 내수 침체로 공급과잉된 저가 물량들이 주변국으로 들어옴
 -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에서 한국 공장 가동을 축소
- ※ 포스코는 24년 12월 제1선재공장 가동 중단
- 이는 한국의 산업 지역이 과거 미국처럼 러스트 벨트화하는 공동화

한국이 처한 4개의 공동화

1 미국발 공동화: 트럼프 이후 미국내 투자 생산 증가, 국내 생산 수출감소

- ▶ 트럼프 2기 관세 부과: eg) 현대차: 멕시코 공장 없고, 미국에 신공장 완성
- ▶ 대미 흑자도 고려하여, 국내 생산 수출 줄이고, 미국내 생산 판매 증가 가능성

2 중국 발 공동화

- ▶ 중국의 소비 둔화: 공급 과잉으로 밀어내기 수출 증가
- ▶ 철강, 석유화학, 등 모든 제품 해당: 국내 산업 기반 붕괴 가능성
- ▶ 미국 식 러스트 벨트화

3 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한 국내발 공동화

노동력 감소 및 노령화로 잠재성장을 하락
소비도 영향 받고, 지방부터 공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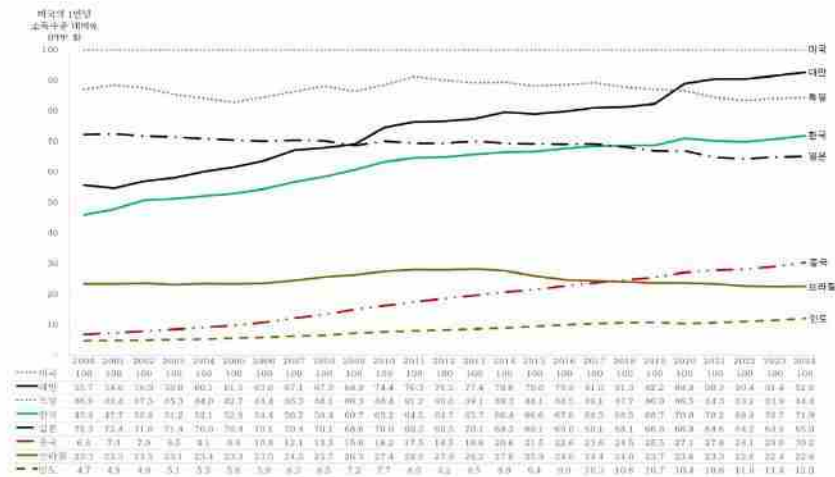
4 계엄 정국 이후 정치적 리더십 공백: 정치적 공동화

한국경제, 성장의 벽에 처한 것인가?

두가지 벽과 한가지 추세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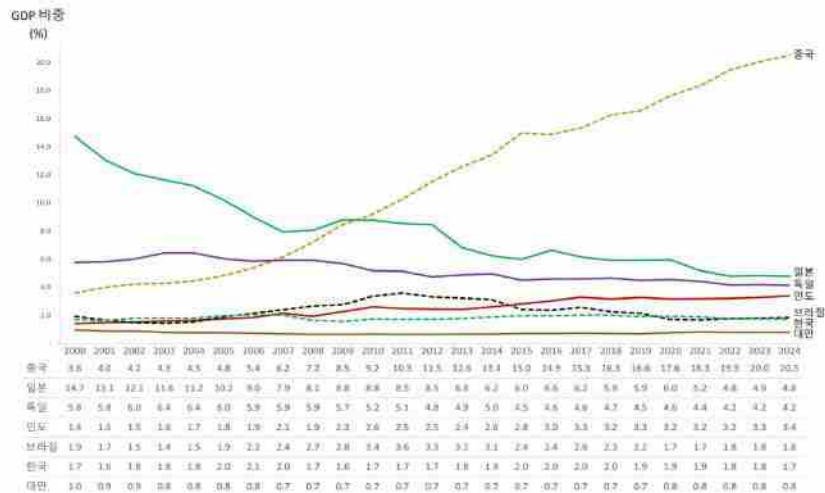
한국경제의 두가지 벽 + 한가지 추세 미국 대비 일인당 소득수준 추이: 한국은 70%내외라는 벽, 대만은 90% 도달



- 한국과 일본은 미국 대비 70% 내외 수준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는 반면,
- 독일과 대만은 모두 85%대를 넘어섰다. 대만의 1인당 소득은 2021년 미국대비 90.3%
=> 90%대를 돌파하여, 70%대인 한국과 20%포인트 이상 차이

8

세계 GDP에서 비중: 한국 다시 2% 밑으로, 12위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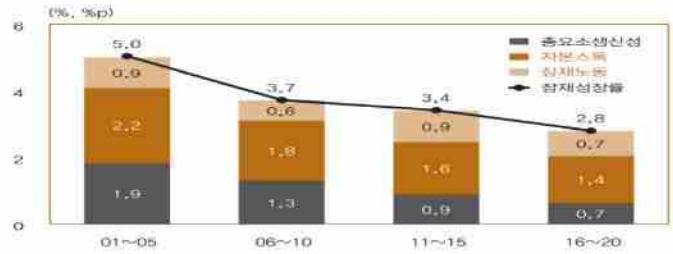


2%를 못 넘는 1.8%로 한국의 순위는 2020년 10위에서 12위로 2단계 하락:
-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 캐나다 이태리 브라질 러시아 다음
- 러시아와 브라질이, 다시 한국을 추월: 각각 10위, 11위; 인도는 2022년 3.2% 세계 6대국.

1가지 추세 = 잠재성장율의 5년마다 1%p씩 하락 = 한국경제의 회색 코뿔소

회색코뿔소가 온다 (미셀부커) = 다가올 가능성이 높고 뻔히 보이는 위험
(블랙스완과 반대 = 금융위기):

<그림 8> 잠재성장율 요인별 기여도¹⁾



주: 1) 생산함수 접근법 기준

여러 나라 감소하나 한국 감소 속도 빠르고, 미국은 2%대에서 상향반전; 독일도 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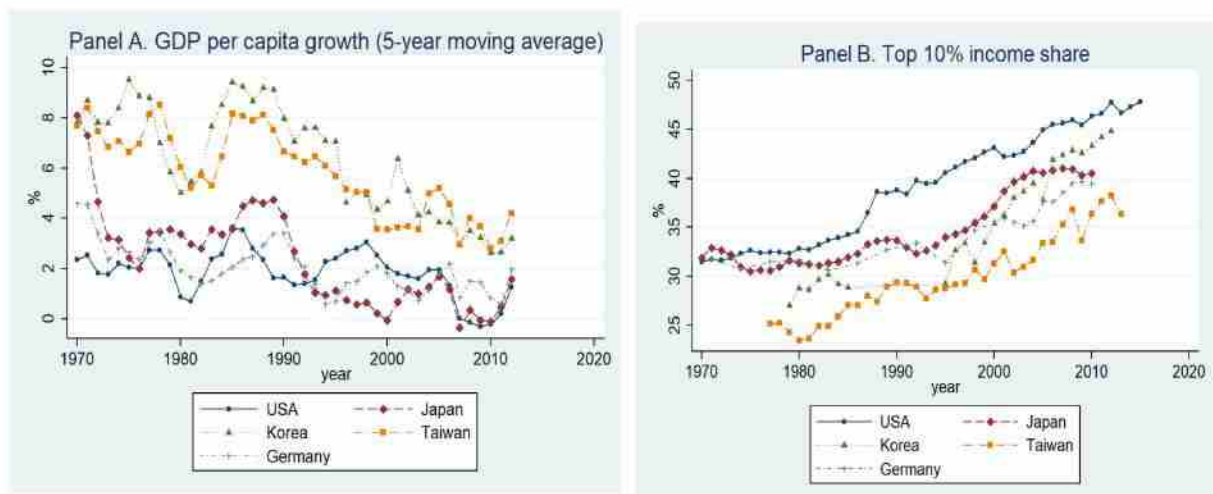
한국 자본주의 유형론:

영미식으로 수렴 vs. 동아시아자본주의 2.0

=> Diverging Convergence (Lee & Kim 2024)

11

성장 저하 + 분배 악화: 동아시아 기적 종언 -> East Asian convergence to US:
in terms of slower growth and rising inequality. (Lee & Shin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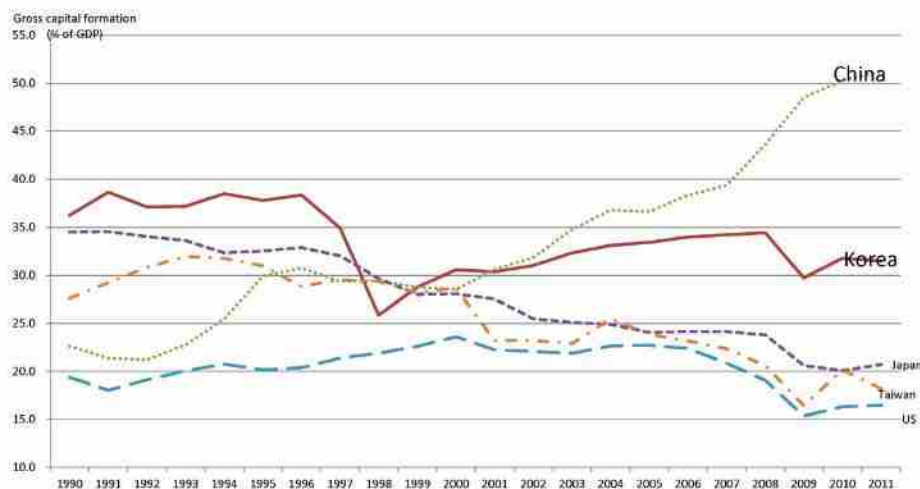
Source: Drawn by the authors using data from PWT 9.0 and the World Wealth and Income Database

12

자본주의의 다양성/ 제 유형 (1955-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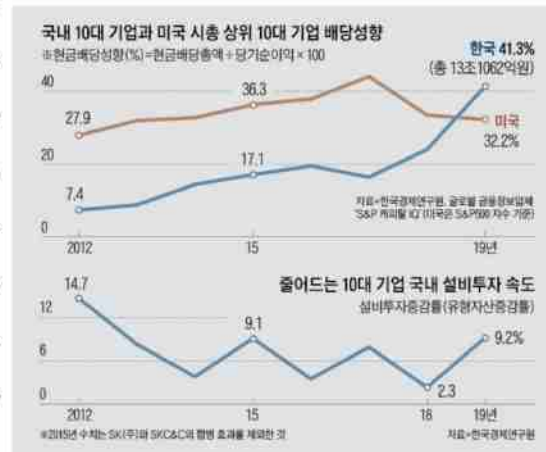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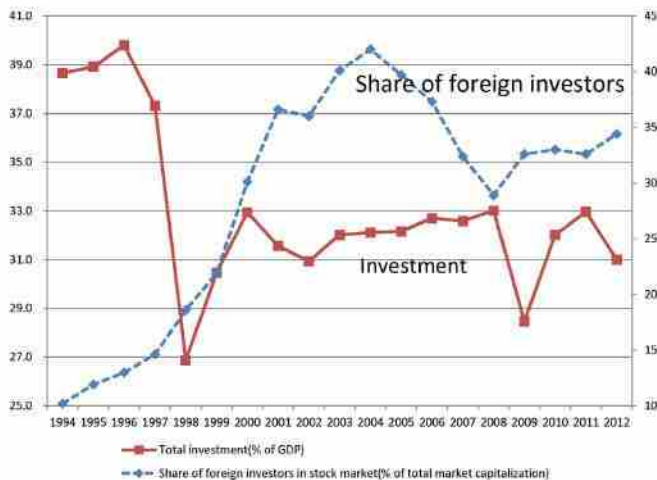
Period	Group 1 (CME like)	Group 2 (MME like)	Group 3 (LME like)	Group 4 (East Asia like)	Group 5
1955-1959	US			Japan	
1960-1964	US			Japan	
1965-1969	US			Japan	
1970-1974	Japan US				
1975-1979	Japan US		Canada	Taiwan	
1980-1984	Australia Denmark Japan US	France Germany Ireland Italy	Canada	Korea Taiwan	
1985-1989	Australia Denmark Japan New Zealand	France Germany Ireland Italy Netherlands Spain	Canada US	Taiwan	
1990-1994	Australia Denmark Germany Japan Netherlands New Zealand	France Ireland Italy Spain	Canada UK US	Taiwan	
1995-1999	Australia Denmark Japan Korea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Sweden	France Germany Italy Spain	Canada UK US	Finland Taiwan Ireland	
2000-2004	Australia Denmark Finland Ireland Korea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Sweden Taiwan	France Italy Spain	Canada Germany Japan UK US		
2005-2009	Australia Denmark Finland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Sweden Taiwan	France Italy Spain	Canada Germany Ireland Japan Korea UK US		
Average of variables for each group					
GDP growth (%)	2.19	1.79	1.39	6.83	8.95
Employment (%)	59.90	47.05	59.27	59.54	50.48
Top 10% share (%)	29.89	31.88	39.50	28.47	35.44
	Good growth, low inequality, high jobs	All in middle	Low growth /High Inequality	High growth Low Inequality	

Korea After the 1997 crisis, Decline of Fixed Investment → The root of slow growth: investment rate reduced by 5%p (35-40% → 30-35%)



High Foreign share -> more dividends
-> low investment
=> Anglo-Saxon Capitalism

Dividend ratio in top 10 Korean > US firm:
higher than 40% in 2019
=> 2가지 과속: 최저임금, 배당



A Puzz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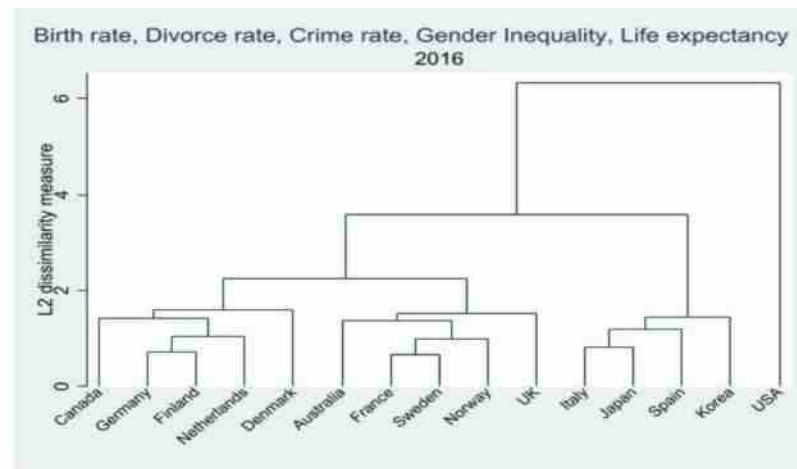
A puzzle:

=> Korean convergence to the Anglo-American capitalism?
despite many differences in underlying institutions,
- labor institutions, corporate governance and culture,
the role and power of the government.

=>Need for some more analysis with more indicators:

- 1) Social indicators, including welfare
- 2) labor market institutions
- 3) political institutions: level of democracy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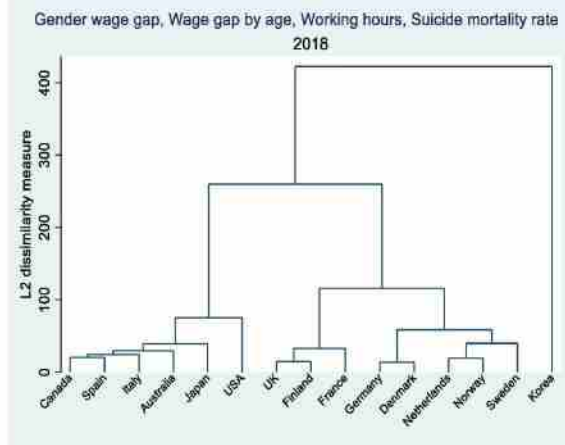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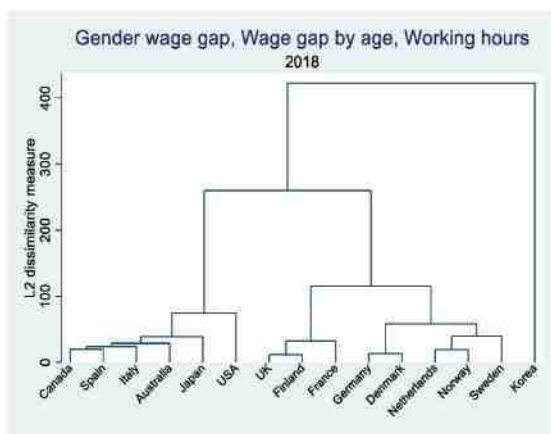
Variety of Capitalism in Social Indicators:
East Asian convergence with Southern Europe => Safe capitalism
(저출산, 저이혼, 저 범죄율, 최장 수명)



17

Birth rate, Divorce rate, Crime rate, Gender Inequality Index, Life expectancy										
	Birth rate		Divorce rate		Life Expectancy		Crime rate		Gender inequality	
	2005	2016	2005	2016	2005	2016	2005	2016	2005	2016
Nordic Europe + Canada = Equal but unhappy capitalism (high divorce, more crime, short live)										
Canada	10.60	10.60	2.2	1.7	80.2	82	2.1	1.7	0.14	0.10
Germany	8.30	11.80	2.4	2.0	79.4	81	1.1	1.2	0.12	0.08
Finland	11.00	9.60	2.6	2.5	79.1	81.5	2.3	1.3	0.09	0.06
Netherlands	11.50	10.10	2	2.0	79.6	81.7	1.1	0.6	0.08	0.05
Denmark	11.90	10.80	2.8	3.0	78.3	80.9	1	1.0	0.06	0.04
Group Avg	10.66	10.14	2.40	2.24	79.32	81.42	1.52	1.16	0.10	0.06
Mixed Group = 'Productive' Capitalism (More child, otherwise modest)										
Australia	12.80	12.90	2.6	1.9	80.8	82.4	1.3	0.9	0.14	0.11
France	12.80	11.80	2.5	1.9	80.4	82.7	1.6	1.4	0.14	0.08
Sweden	11.20	11.80	2.2	2.4	80.7	82.4	0.9	1.1	0.05	0.04
Norway	12.30	11.30	2.4	1.9	80.3	82.5	0.7	0.5	0.09	0.05
UK	12.00	11.80	2.6	1.8	79.2	81.2	1.4	1.2	0.20	0.14
Group Avg	12.22	11.92	2.46	1.98	80.28	82.24	1.18	1.02	0.12	0.08
Southern Europe + Kor/Japan = Safe Capitalism (no child, less divorce, long live, less crime)										
Italy	9.60	7.80	0.8	1.6	80.9	83.4	1	0.7	0.18	0.08
Japan	8.41	7.80	2.1	1.7	82	84.1	0.5	0.3	0.15	0.11
Spain	10.60	8.80	1.7	2.1	80.3	83.5	1.2	0.6	0.12	0.08
Korea	9.00	7.90	2.6	2.1	78.2	82.4	0.8	0.7	0.11	0.07
Group Avg	9.40	8.07	1.80	1.87	80.35	83.35	0.88	0.57	0.14	0.08
US (high risk, Dangerous cap.)	14.00	12.2	3.60	3	77.60	78.7	5.70	5.4	0.26	0.23

Varieties of Capitalism in Labor Market Institutions (+ Suicide Rates): 'Path-dependent' Korea = an outlier



19

Gender wage gap, Wage gap by age, Working hours, (Suicide mortality rate), 2018								
	Gender wage gap		Wage gap by age		Working hours		Suicide mortality rate	
	2006	2018	2006	2018	2006	2018	2006	2018
Mixed group (US, Japan, Italy etc) More/long Work Hours								
Canada	21.12	18.52	3.44	0.15	1744.00	1708	11.20	12.00
Spain	13.53	8.62	22.35	13.94	1713.70	1697.62	7.50	7.80
Italy	10.51	5.71	29.46	18.52	1811.90	1719.40	6.70	6.70
Australia	16.67	16.14	-0.27	1.24	1802.43	1732.54	10.60	12.40
Japan	32.98	23.54	0.68	1.83	1785.56	1680.17	23.90	16.70
United States	19.25	18.91	7.93	8.65	1796.33	1781.57	12.10	15.70
Group Average	19.01	15.24	10.60	7.39	1775.65	1719.88	12.00	11.88
UK/France, Finland= Med work, more gender gap, less senior premium								
United Kingdom	21.72	16.31	-4.70	-1.90	1536.39	1536.18	7.80	8.10
Finland	-2.12	18.86	6.28	3.24	1608.00	1546.37	21.00	16.20
France	9.39	11.82	32.31	17.08	1515.00	1514.41	18.50	14.20
Group Average	9.66	15.66	11.30	6.14	1553.13	1532.32	15.77	12.83
Nordic Europe = Less work, Gender-Equal Pay, more senior premium								
Germany	18.54	15.44	9.26	9.75	1453.20	1384.70	12.80	12.90
Denmark	10.17	4.86	2.40	2.45	1455.70	1381.29	14.70	11.40
Netherlands	15.98	12.66	13.62	14.95	1430.45	1436.06	9.60	11.40
Norway	8.21	5.13	3.99	10.03	1426.40	1419.20	12.80	12.00
Sweden	11.02	7.14	2.96	5.33	1450.12	1466.18	15.00	14.90
Group Average	12.78	9.05	6.45	8.50	1443.174	1417.49	12.98	12.52
Korea	39.77	34.11	29.46	18.52	2228.00	1993.00	23.70	28.60

The Indexes for Labor-Working Status Investigated by OECD (2018)

	Strictness of Employment Protection: Regular Indiv. Dismissal	Strictness of Employment Protection – Indiv. temporary Contracts	Public Expenditure on LMP (Active Measures)	Public Expenditure on LMP (Passive Measures)	Collective Bargaining Coverage	Share of Temporary Employment	Trade Union Density
Korea	2.42	2.13	0.36	0.38	14.80	21.20	11.60
Japan	1.37	1.00	0.15	0.15	16.90	15.70	17.00
Group Average	1.90	1.57	0.26	0.27	15.85	18.45	14.30
USA	0.09	0.25	0.10	0.15	11.70	-	10.10
UK	1.35	0.38	-	-	26.00	5.60	23.40
Canada	0.59	0.25	0.21	0.49	30.10	13.40	25.90
Australia	1.67	0.88	0.24	0.55	61.20	-	13.70
Group Average	0.93	0.44	0.18	0.40	32.25	9.50	18.28
France	2.56	3.00	0.75	1.97	98.00	16.70	-
Germany	2.60	1.38	0.68	0.70	54.00	12.60	16.60
Italy	2.47	1.63	0.42	1.14	100.00	17.00	32.60
Spain	1.96	2.47	0.71	1.45	80.10	26.80	13.00
Group Average	2.40	2.12	0.64	1.32	83.03	18.28	20.73
Sweden	2.45	0.81	1.11	0.46	88.00	16.80	65.60
Netherlands	3.44	1.19	0.59	1.37	76.70	21.50	16.50
Denmark	1.53	1.63	1.89	0.98	82.00	10.60	67.50
Finland	2.00	1.56	0.94	1.27	-	16.50	60.00
Norway	2.33	2.50	0.42	0.36	-	8.40	49.90
Group Average	2.35	1.54	0.99	0.89	82.23	14.76	51.90

Active LMP (2018) as % of GDP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Public employment services	20. Training	40. Employment incentives	Sheltered/ supported employment & rehabilitation	60. Direct Job Creation	70. Start-up Incentives	Out-of-Work Income Maintenance and Support
Korea	0.05	0.06	0.04	0.02	0.15	0.04	0.38
Japan	0.07	0.01	0.06	0.01	-	-	0.15
Group Average	0.06	0.04	0.05	0.02	0.15	0.04	0.27
USA	0.02	0.03	0.01	0.03	-	-	0.15
UK	-	-	-	-	-	-	-
Canada	0.11	0.06	0.01	-	0.01	-	0.49
Australia	0.15	0.01	0.01	0.06	-	0.01	0.55
Group Average	0.09	0.03	0.01	0.05	0.01	0.01	0.40
France	0.24	0.25	0.03	0.09	0.11	0.04	1.97
Germany	0.43	0.18	0.02	0.02	0.02	0.01	0.70
Italy	0.06	0.11	0.24	0.01	-	-	1.13
Spain	0.15	0.12	0.08	0.11	0.12	0.13	1.43
Group Average	0.22	0.17	0.09	0.06	0.08	0.06	1.31
Sweden	0.28	0.10	0.49	0.24	-	0.01	0.46
Netherlands	0.20	0.06	0.02	0.30	0.01	-	1.37
Denmark	0.38	0.39	0.19	0.94	-	-	0.88
Finland	0.15	0.38	0.08	0.12	0.20	0.02	1.27
Norway	0.14	0.09	0.08	0.11	-	-	0.36
Group Average	0.23	0.20	0.17	0.34	0.11	0.02	0.87

한국자본주의 Convergence or New divergence: Diverging Convergence.

1) Korean Capitalism = a mix/hybrid of different elements from different capitalisms

- a) Macro-finance/ political democracy: Anglo-American
- b) Social indicators : Southern European : safe capitalism as Italy, Spain and Japan
- c) Labor market institution: Extreme outlier (with long working hours and gender wage gap)*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Korea closer to Europe (also difficult to fire in Korea)

⇒ Not easy to say: Korean capitalism converges to any particular type of capitalism .

A strange combination? Multi-faced convergence?

⇒ another (E Asian) variance of advanced (mature) capitalism = E Asia Capitalism 2.0
the end of the east Asian miracle (no more high growth and equity)

And, still there is a need /room for further improvement

- 역동적 한국자본주의의 재창조 by a new combination
- 미국 정도 혁신성 (재벌) + 남유럽식 안전성 + 북구식 유연안정 노동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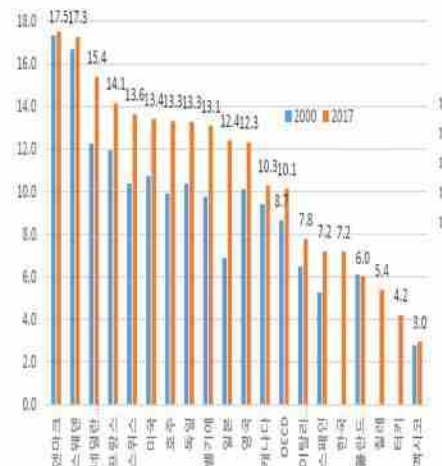
reform of labor institution = flexicurity + active labor market policy (ALMP)

23

한국의 여성고용율=최저 (좌) vs, 낮은 보건/의료 사회복지 노동 비중 (우)



자료: OECD Employment Database Data for Chart 1W1-4.1. Age-employment profiles by sex, 2018



사회 서비스 (출산, 육아, 보육) 강화로 여성고용율 향상 → 노령화 대응의 단기적 방안

감사합니다!!!

Some references

Lee, Keun & DJ Kim (2024), "Compressed Development, Decompression, and Diverging Convergence: Which Variety of Capitalism in Contemporary Korea," *Review of Evolutionary Political Economy*.

Lee*, Keun, Ho-Chul Shin, and Jongho Lee, (2020), "From Catch-up to Convergence? Re-casting the Trajectory of Capitalism in South Korea, *Korean Studies* .

Lee, Keun, and Hochul Shin. 2019.
"Varieties of capitalism and East Asia: Long-term evolution, structural change, and the end of East Asian capitalism,"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s,

Hochul Shin and Keun Lee, 2019
"Impact of Financialization and Financial Development on Inequality: Panel Cointegration Results using OECD Data,"
Asian Economic Papers.

25

트럼프 2기, 대한민국 산업 정책 및 인재 정책을 그리다

발표 1

트럼프 2기 통상·산업 정책이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양주영 실장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

트럼프 2기 통상산업 정책이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 양주영 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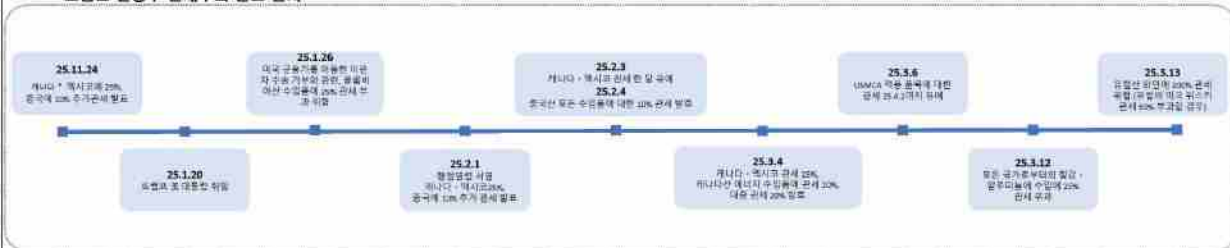


美 신정부의 산업통상 정책

I 美 신정부의 산업통상정책

◆ 관세부과를 통한 보호무역주의 추진

- 보편관세/상호관세 부과를 통한 자국 산업 보호 및 무역협정 재검토
 - 취임 이전 공약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 보편관세 및 중국 수입품에 대한 60% 추가 관세 부과
 - [산업연구원, 2024.11] 보편관세 부과로 인한 한국 대미 수출 감소 효과는 -9.3%~13.1%
 - 취임 이후 행정명령 '25.2.1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 25%, 중국에 대해 10% 추가 관세 부과 발표
 - 철강알루미늄 품목 관세 '25.3.12 모든 국가로부터의 철강·알루미늄 수입에 대해 25% 관세 부과 발표
- 트럼프 신정부 관세부과 발표 일지



I 美 신정부의 산업통상정책

◆ 미국 우선주의와 제조업 부활 산업정책

- 자국우선주의를 기조로 전통제조업 지원 강화와 친환경 정책 후퇴, AI 중심 산업정책 전환
 - **전통제조업 지원 강화** 보조금 및 세액공제, 관세 및 쿼터 활용을 통해 자동차, 철강, 화학, 방산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친환경 정책 후퇴** 취임 이후 행정명령을 통해 전기차 관련 예산철회 및 세액공제 혜택 폐지 검토, 전기차 의무 판매정책 폐지
 - **첨단산업 지원 강화** 신기술·신산업(AI, 우주, 암호화폐, 반도체, 헬스케어, 첨단소재) 분야 규제 완화 및 지원으로 미국의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 대중 견제 강화

- 중국을 미국의 공급망에서 전면 배제하는 디커플링 전략 추진
 - **대중 수입 관세 인상** 대중 수입에 10% 추가 관세부과 시행(25.2.4 부터 발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10%에서 20%로 인상(25.3.4)
 - **공급망 디커플링** 미 상무부 및 USTR에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박탈 검토 지시, PNTR 철회 시 미국 시장에서 중국 산 수입품 관세 인상
 - **첨단 기술 수출 제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 컴퓨팅, 바이오 기술 등 첨단 기술의 대중 수출 제한 강화

美 新정부의 산업통상정책

◆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25.1.20]

- 행정명령을 통해 기존 무역협정과 무역 적자에 대한 조치를 지시, 미국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협정의 재검토 추진
- 중국의 미중무역합의 이행 준수 및 추가적인 비합리적차별적 무역관행 조사 및 대응 방안 검토 지시

장표 구분	주요 연방 부처(部) 및 대통령 조사·보고 명칭	조사·보고 책임	
		주	부
Section 1 목적(Purpose)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 보장 산업·기술발전의 촉진, 투자 촉진, 생산성 제고 간접적 대규모 상품무역수지 적자 추경 조정 기능 (a) 상품무역수지 적자의 국가·경제안보 리스크 저지 상품무역수지 적자 축소 방안 (보통 관세) (b) 대외수입(EIS: External Revenue Service) 산업 지원 및 실패 예방·회생	상무장관 무역대표	재무장관 무역대표
Section 2 출발점 중요한 무역 교역	(c) 글로벌 무역협약(자유 무역 협정 포함) · 1930 관세법, 1962 무역확장법, 1974 무역법, 1975 무역협정법 및 1977 대통령 비상경제권한법 등 근거	무역대표	재무장관 상무장관 통상·제조업 산업보좌관
	(d) 2025 개정 USMCA 제정할 관련 공약의 이행 USMCA 이행 평가 보고서 작성 및 관련 이행보고 보고 (노동자, 농업, 서비스 종사자 및 기업 등)	무역대표	부처 학인인
	(e) 교역대상국 현황 정책 및 관세 조사 현물 및 물·물교환(Barter)을 통한 수입 현물 조작국(Currency Manipulators) 및 국가 간 통화	재무장관	
	(f) 1930 관세법 개정 관련 제사 (불법 수입·코스·과세) 미국 개관 및 법안 대상 한국 상품의 개별적 과세 효율 역외소득 과세 사례 현황 조사	무역대표	재무장관 무역대표
	(g) WTO 협조위원회 설립, 무역의 자유 무역협정 내 정부조달 관련 협정 · 행정안전부 13788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내 정부조달 우선 제 도 도입 관련 제사 여부 결정 및 향후 국내 제조업체 및 노동자 수혜 위한 방안	무역대표	통상·제조업 산업·제조업 선진보좌관

美 新정부의 산업통상정책

◆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25.1.20)

장표 구분		주요 연방 부처(장) 합 대통령 조사 · 보고 행형	조사 · 보고 책임		장표 구분		주요 연방 부처(장) 합 대통령 조사 · 보고 행형	조사 · 보고 책임	
			주	부				주	부
Section 3 대중(對中) 경제·통상 정책	(a)	중국 정부 제1차 미중무역협약(Q01) 이행 리우 준수 여부 조사 · 이행 위한 (추가) 관세 부과 등 조치 방안	무역대표		Section 4 경제 안보	(a)	● 산업·재거간 경제안보 중앙·전단 보고 A Full Economic & Security Review of the United States' Industrial & Manufacturing Base · (국적) 국 가 자 원 보 수 로 위 한 수 입 제 한 (조 정) (법률) 1962년 무역확장법 1962년 「외국인투자법」	상무장관	국방장관
	(b)	무역대표부(USTR) 대중국 301조 조사 보고서 검토 · 잠재적 대중국 관세 조치 등 대응 방안 · (주요업) 산업공급망 · 제3국 우회수출 ·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인한 비용(피해) 주산 최신화(Update)	무역대표			(b)	질문 및 불응하는 대상 물 1962년 무역확장법 조치 (제외, 제외 및 수입 제한 조치 · 쿼터·관세 포함) 현황 조사 및 실행성 점검 · 국가·안보 보장 위한 개선 방안	상무장관	경제·통상 무역대표 통상·거주업 선정·최적화
	(c)	중국의 추가적 비합리적 · 차별적 무역 관행 조사·대응 방안 · 1974년 무역법 2411장 내 무역대표 조치 권한 개 방안 포함	무역대표			(c)	전략적 경쟁력 및 혁신과 대상 수출통제 시스템 진단 기술협력 및 무역 유치 및 혁신(Lophole) 식별·보완 방안 · (중점) 전략자출·소프트웨어·서비스·기술 등 외국 주체의 수출통제 준수(Compliance) 위반 탐진	상무장관	국무장관 수출통제 관련 책임자
	(d)	대중국 중국적정성무역규제(PNTR) 철폐 압력 검토	상무장관	무역대표		(d)	산업보안관리(ISA) 및 정보통신기술·서비스(ICT) 관련 ‘커넥티드 카’ 관련 감독 중 현황 조사 및 개선 방안 이외 ICT제품 추가 거래 관련·감독 관련 부처 필요 여부	상무장관	
	(e)	중국에 공여(Conferred)된 미국의 지식재산권 (특허, 저작권, 상표권 등) 현황 조사 및 평가 · 상호성 및 균형 보장 위한 조치 방안	상무장관			(e)	비이전 행정부 청안기술(반도체·양자 등) 분야 지적 재산권명 14905호 및 해당 유산조치(Inf. Reg. 9039) 검토 · 수정·처각·고제 필요 여부 및 실행성 평가 · 참가 조처 기반 「대외투자안보규칙」 개정 방안 제출	재무장관	상무장관
						(f)	제조 정부의 특연보 조달 사용 접근 위한 금융지원 및 보조금 등 배국 행위 조사 · 대응 위한 규제·입법 제언	국회예산실장	
						(g)	캐나다·멕시코·중국 등 불법 이민 및 탈출비 불법 경도 조사 · (법률) 비합리적 타국 국외 귀환 불응 투사 및 국외거주자 입국	상무장관	국토안보실장

美 신정부 정책의 산업별 영향

II 美 신정부 정책의 산업별 영향

◆ 산업별 기발표 및 발표 예상 정책 [1]

산업	현실화 가능성 높은 조치	영향	불확실성이 높은 조치	영향
반도체	• 새 반도체 11 공급 제한 강화	• 중국 EMS 기업 제재 강화로 한국 기업 점유율 상승 가능 • 국내 반도체 기업의 중국내 생산시설 운영 리스크 증가	• 중국산 반도체 디바이스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10%) • 반도체 관세 부과 범위 및 수준 미정	• 미국 시장에서 대체 공급자로서의 역할 강화 • 한국 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 • 관세 부과시 경쟁력 저하
	•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 (2nm 이하 공급선 다변화 시도 가능성 ↑)	• 미국 내 투자 확대 압력 증가	•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보조금 및 세액공제 규모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	• 미국 내 반도체 투자 비용 부담 증가, 투자 계획 변경
	• ② 소재·설계 수행 기업 대상 25% 추가 세액공제 법안 논의 (STAR Act)	• 반도체 공급망에서 미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 한국반도체 소재장비 기업 경쟁력 저하 가능 • 핵심 소재 미국 내 생산 확대 압력 증가	• 미국 정부의 인텔·마이크론 등 자국 반도체 기업 지원 확대 가능성	• 한국 기업 경쟁력 저하
자동차	• 내연차 규제 완화	• 전기차 수출 둔화 및 하이브리드 차 수요 증가	• 전기차 보조금 철폐 여부 및 축소 수준	• 가격 상승에 따른 전기차 시장 위축
	• 수입 관세 인상 (중국산 자동차 및 부품,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가능성)	• 현대기아차의 멕시코 공장 수출 비용 증가 • 중국·멕시코산 자동차 대비 가격 경쟁력 상승	• 한국산 자동차 수입관세 부과	• 가격경쟁력 하락·대미 수출 감소
	•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및 지원 강화	• 반도체 기업의 자율주행용 반도체 및 칩 공급 확대 가능성	• 관세 인상 후 부담 전기 방향	• 기업 일부 부담, 중간재 수입국에 전가, 최종 소비자 전기 여부에 따라 상이한 영향
배터리	• IRA 생산 혜택 축소 • 전기차 보조금 축소 및 철폐 • 내연기관차 규제 완화	• 전기차 수요 감소로 인한 수출 등 산업 성장 감소		
	• 중국 배터리 기업 제재	• 중국산 배터리 의존도 감소, 한국 기업 반사이익 가능	• IRA 집단 원조 생산세액공제 축소 여부	• 기업의 투자비용 증가
	•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 자율주행차용 고용량 배터리의 수요 증가 가능성 (충전기적)		

I 美 신정부 정책의 산업별 영향

◆ 산업별 기발표 및 발표 예상 정책 [2]

산업	연실화 가능성 높은 조치	영향	불확실성이 높은 조치	영향
철강	· 25.2.10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 부과	· 가격 경쟁력 약화 및 대미 수출 감소	· 기존 무역협정 폐지 여부 (특정 협정이나 조항 변경 가능성)	· 한국 철강 제품의 미국 수출 조건 약화에 따른 수출 감소
	· 제철 소재 공급망 활동국 가속화	· 한국 기업에 대해 공급지 역할 가능	· 우회수출 방지 위한 원산지 기준 변경 가능성	· 원산지 증명 부담 증가 및 공급망 재편 필요성
	· 미국 내 리사이클링 촉진 및 법안제 인허가 정책	· 미국 내 생산 증가로 현지 기업과의 경쟁 심화	· 반덤핑·상계관세 적극 활용 및 특정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 적용 확대 가능성	· 추가 관세 부과 및 시장 경쟁력 약화
	· 외식연료 생산 규제 완화	· 철강 및 관련 업종 수요 증가		
조선	· SHIPS법 발의(전략상선단 확대, 우방과의 조선 협력 확대 등)	· 미국의 해군 항정 건조 등 한국 조선 수요 및 기술협력 기회 증가		
	· 군함 및 해상전력 강화	· 중국 조선소 비용 증가로 한국 조선소의 상대적 가격 경쟁력 향상		
	· 대중 경제 조치(영안세 부과, 중국에서 선박 수리시 200% 세금 등)	· 기원 증가, 협력 범위 및 실제 발주 규모는 불확실		
의약품	· 관세부과를 통해 필수약품 미국내 생산 유도	· 현재 수주 물량에 대한 관세 영향은 제한적 미국산 바이오시밀러 제품과 경쟁시 관세부과로 인해 경쟁력 저하	· 생물보안법(Bioscience Act) 입법 추진 등 대중 견제 확대	· 생물보안법 제재 대상 기의 영역 중 일부 이전 및 흡수

II 산업별 리스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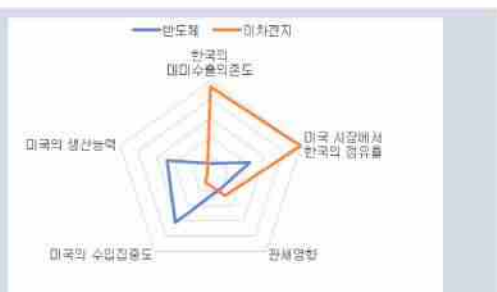
◆ 산업별 리스크 수준 분석

- 한국의 산업별 대미 수출 비중 : 산업의 대미 의존도
- 미국의 산업별 한국의 수입 점유율: 한국의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 산업별 대미 수출품의 관세 영향: 보편 관세의 산업별 민감도
- 미국의 대체 공급망 확보 가능성: 미국의 수입집중도 (집중도가 높을수록 대체 공급망 전환이 어려우며 리스크가 증가)
- 미국의 국내 생산 대체 가능성: 현재 미국의 생산과 수입 비중 (생산은 수출로 대리변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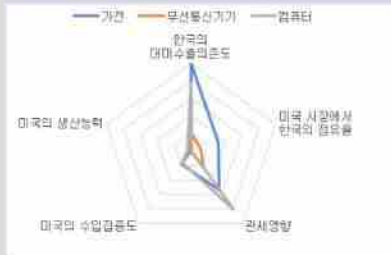


[반도체 및 이차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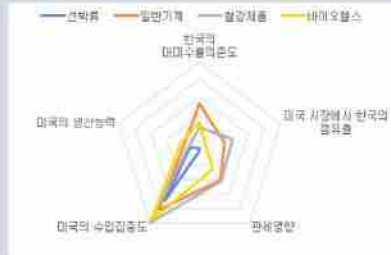


II 산업별 리스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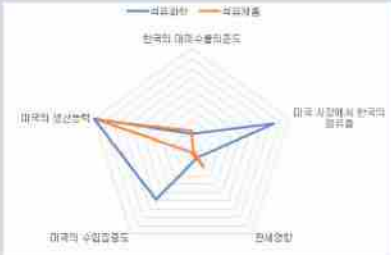
[가전 및 무선통신기기]



[선박 · 기계 · 철강 · 바이오]



[석유화학 및 석유제품]



II 산업별 리스크 분석

◆ 분석 결과 [산업별 리스크 상황]

1. 대미 수출의존도 높은 산업 [미국 시장변화에 민감도 高]

- 가전, 자동차, 배터리, 자동차 부품, 컴퓨터, 일반기계 순

2.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높은 산업 [현재 한국이 경쟁력 보유]

- 배터리, 석유화학,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순

3. 관세의 부정적 영향 [관세부과로 경쟁력 약화]

- 보편 관세 부과 시 주요국과의 대체효과 고려할 경우 (고위험) 자동차 부품, 컴퓨터, (중위험) 가전, 철강제품, 일반기계, (저위험) 자동차,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

4. 미국의 수입 집중도 [미국 입장에서 다변화 필요]

- 철강제품, 바이오헬스, 일반기계 고위험

5. 미국의 생산 능력 [자국우선주의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수입에 의존 가능성 高]

- 석유화학 및 석유제품 제외 거의 모든 분야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선박, 일반기계, 철강제품, 바이오 헬스, 배터리 등] 상당히 낮은 수준, 반도체의 경우 중위 수준

한국의 대응 방안

III 종합평가 및 대응 방안

◆ 미국 신정부의 산업통상정책 및 한국 산업 영향 종합평가

• [명확한 미국의 정책 방향] 미국의 제조업 회귀 및 글로벌 공급망 재구조화

- 공약 현실화 선거기간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들이 취임 이후 행정명령을 통해 순차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으며, 주요 부처들의 검토보고서가 완료되는 ' 25.4.2 이후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 예상
- 관세를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선제시 후협상 추진과 같이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한 미국에 유리한 무역 구조 변경 시도 지속될 전망
- 실질적 관세 부과 캐나다·멕시코에 대해 25%, 중국에 대해 20% 관세 부과, 캐나다·멕시코 에 대해서는 25.4.2까지 유예, 25.4.2 이후 상호 관세 및 양자협상 시도 예상

• 한국 산업에 단기적 피해 불가피, 중장기로는 기회로 작용 가능성

- 대미·대중 수출 비중이 높고 캐나다 및 멕시코를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한국 산업의 현재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상 단기적으로 타격 불가피
- 관세 인상 및 반덤핑 조치 강화 등으로 인한 수출 감소 및 가격 경쟁력 약화, 미국 내 생산 시설 없는 기업들 불이익 가능성
- 중장기적으로 기회로 작용: 미국의 제조 생태계와 보완 관계를 구축하고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전략 마련
- 단순 경쟁자가 아닌 미국 제조업과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급망 전략 조정 필요
- 미국 내 생산 확대 및 공급망 현지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반도체·배터리·조선·방산·첨단소재 분야에서 보완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III 단기적 대응

◆ 업종별 리스크 관리 조치 수립 및 추진

• 업종별 통상 현안 대응 및 미 산업정책 편승 전략 수립

- [자동차] 중국·멕시코산 자동차 부품 25%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 미국 시장을 목표로 캐나다·멕시코 현지에 진출한 기업 및 미국내 생산 기업의 공급망 조정 필요성 및 가능성 모색, 미국 내 완성차 및 부품 공장 증설을 통한 현지화 생산 확대, 시장 다변화
- [반도체]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로 한국 기업의 중국 생산 리스크에 대한 관리 필요, 보조금 및 세액공제 등 자국우선주의 정책에 기반한 美 기업 생산 역량 강화 추세에 대응, 미국 내 첨단 반도체 투자 확대 및 미 정부와의 협의 채널 강화
- [조선] 미 해군 및 상업용 선박 수요 증가에 따라 조선업 협력 강화, 대미 수출 확대와 함께 미국 현지 수리·정비(MRO) 네트워크 구축 등 서비스 분야 진출 검토

◆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생산 공백인 부문에 대해 투자 및 수출 확대

• 현지 생산 확대를 위한 대미 투자 확대 지원

- [산업별 투자 확대 대상 식별] [반도체] 미국 내 파운드리 및 후공정 투자 확대, [자동차] 미국 내 생산 거점 확충, [조선·방산] 미 해군 방위산업 협력 확대
- [금융제 지원정책] 대미 투자 전용 금융 지원 신설 및 금리·보증한도 우대, 투자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정부 보증 프로그램 확대, 미국 내 기업 인수·합병 지원, 세제 인센티브 제공

• 수출 품목 고도화

- [미국 자체 생산능력 제한 영역 공략] 미국이 필요로 하지만 현재 자체 생산능력이 부족한 첨단기술, 핵심 부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 품목 다변화

III 중장기적 대응

◆ 한미 연계 공급망 구축을 위한 대미 전략적 밸류 체인 구축

• 미 제조 생태계 공백을 고려한 한-미 전략적 밸류 체인 구축

- [미국의 산업 공백 영역에 대한 전략적 접근] 미국의 제조 생태계에서 한국의 기여가 가능한 부문에 대해 공동 연구개발 등 전략적 산업 협력 확대를 위한 투자 증대
- 미국 제조 공정의 공백 영역 파악: 미국의 핵심 소재 및 공정 분야에서 자국 내 생산이 취약한 품목에 대한 상세 현황 분석
- 자국 내 생산 역량 확대를 추진하나, 기술·공정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고비용 구조로 인해 타국과 협력이 필요한 분야 공략
- [전략적 합작 투자 및 합작 법인 확대] 공백 산업 분야에 대한 한-미 합작 생산 플랫폼 구축
- 미국 현지 한미 합작 생산 시설 설립 및 美기업과 지분 참여형 합작법인 설립 지원: 미국 내 인프라·자금, 한국의 제조 기술 결합

➡ 미국의 보호주의적 산업정책 및 현지화 요건을 충족하면서 한국의 기회 확대

III 중장기적 대응

◆ 미중 경쟁 속 중국의 첨단 제조 허브 지위 약화에 대비한 한국의 주도권 확보 전략 필요

- 글로벌 탈중국 수요에 대응하여 중국 대체 제조 거점으로서의 부상 전략 마련
 -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외 제조 거점 다변화 전략을 활용한 한국 내 투자 확대 유도
 -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FDI 인센티브 확대, 한국 내 R&D 센터 설립 촉진
 - 글로벌 기업에 세제 혜택, 부지 제공, 규제 완화 패키지 제공
 - 동남아시아·인도 등을 연계한 한국 중심 공급망 구축
-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국내 제조 생태계 고도화 및 첨단 제조 경쟁력 강화
 - 반도체·배터리·미래차·AI·스마트팩토리 핵심기술 집중 투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한 세제 혜택 확대, R&D 지원금 증액
 - 스마트 제조 전환 가속화: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스마트 공장 솔루션 보급 확대, 디지털 트윈 기반 생산공장 최적화 지원 사업 확대
 - 첨단 인력 양성: 반도체·AI·첨단 소재 전문인력 양성 대학·산업 협력 프로그램 확대, 해외 인재 영입 위한 지원 패키지 도입

III 산업구조 전환과 인력 개발

◆ 한국 산업구조 변화

- 제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에 따른 국내 공급망 공백 발생
 -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제조업의 미국 생산 비중 증가
 - 대기업 중심으로 미국 현지화(현지 생산 및 고용) 강화
 - 국내 투자 감소에 따른 고용 감소 및 산업 생태계 약화
- 중소기업 및 협력 업체 양극화 심화
 - 대기업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일부 중견중소기업은 해외 동반 진출 가능
 - 자금력 및 진출 역량 부족한 다수의 중소기업은 국내 수요 감소 및 경쟁 심화 직면
- 고부가가치 분야로 산업 전환 압박
 - 조립 및 생산 중심 산업은 해외 이전 가속화
 - 국내에는 반도체 설계, AI, 소프트웨어, 바이오 등 지식 기반 고부가 산업 중심 구조 이동

◆ 한국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필요한 직업 교육 및 인력 양성 필요

- 국내 전통 제조업 노동자 일자리 감소 가능성, 고부가가치 산업 인력 수요 증가
- 숙련 제조 인력의 직무 전환 불가피

감사합니다

트럼프 2기, 대한민국 산업 정책 및 인재 정책을 그리다

발표 2

트럼프 정부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와 인력수요 전환 쟁점

길은선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인구감소·고령화대응연구실)



Outline

1. 트럼프 관세정책 이면에 숨은 글로벌 거시경제의 본질 :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2. 관세가 수요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조건
3. 미국 제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접투자 요구
4. 산업구조 및 인력수요 전환에 대한 시사점

트럼프 정부 관세정책 이면에 숨은 글로벌 거시경제 문제의 본질

Part 1

코로나19 회복기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PNG, 곡물, 식용유'
수출 제한으로 인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와 고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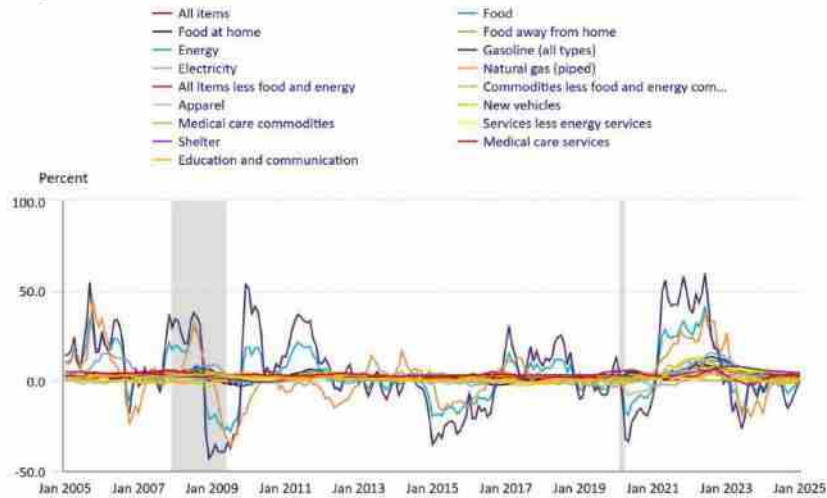
Part 1

- 연준은 고물가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금리를 낮추지 않겠다는 입장 (1977 수정연방준비법 Price Stability와 Maximum Employment 두 가지 목표 명시 -> 1980년대 볼커 인플레이션 중심 목표 수정 -> 1990년대 Inflation Targeting -> 2021 버냉키 2% rule)
- 2024년 12월 10일 경제클럽연설 파월: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으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2025년 1월 25일 FOMC 후 기자회견 파월: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 2025년 2월 15일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 파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우리의 목표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미국 물가 상승은 에너지가 주도

- 가솔린,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섹터가 인플레이션을 주도

12-month percentage change, Consumer Price Index, selected categories, not seasonally adjusted



Source: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5

미국 고금리와 강달러의 관계

• 2022년 이후 달러 환율은 무역보다는 금융이 주도



6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의 악순환

Part 1

- 트럼프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다루는 데 지엽적으로 접근하여 실패하고 있으며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
 - 2025년 1월 29일 트루소셜 트럼프: 연준은 은행규제와 관련해 형편없었다. 재무부가 불필요한 금융 규제 감축하고 대출을 풀 것이다. 에너지 생산을 활성화하고 국제무역을 재조정하고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켜 이를 해결하겠다.
 - 2025년 1월 23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트럼프: 금리는 인하되어야 한다. 이는 다가올 관세와 함께 진행될 것이다. (Lower interest rates would go hand-in-hand with tariff.) OPEC 회원국에 석유가격 인하를 요청할 것이다.
 - 2025년 2월 5일 폭스 인터뷰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Fed에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지 않으며, 우리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에 집중하고 있다. 관세의 목적은 핵심분야(조선, 의약품)에서 미국 제조업의 재건을 돕는데 있다.
 -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초: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저금리로 가게 하기 위한 금융규제 (SLR; Supplementary Leverage Ratio) 완화와 함께 관세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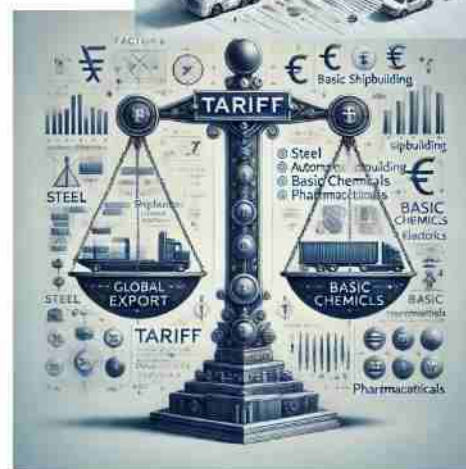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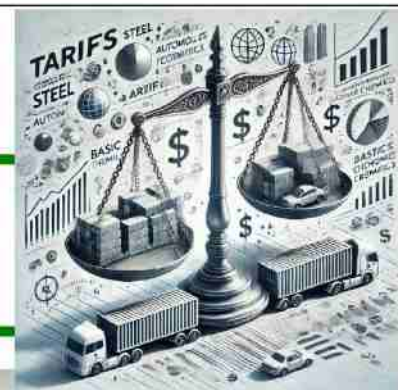
7

”

관세가 수요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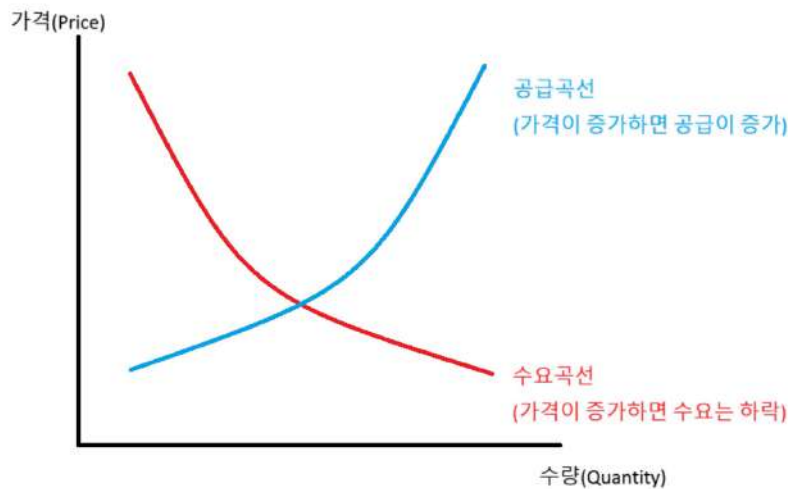
Part 2

이질적 상품
기술 격차
공급 캐퍼시티
수요독점
번들링
무엇보다 환율



Part 2 | 가격이 수요를 결정하는 것은 제한적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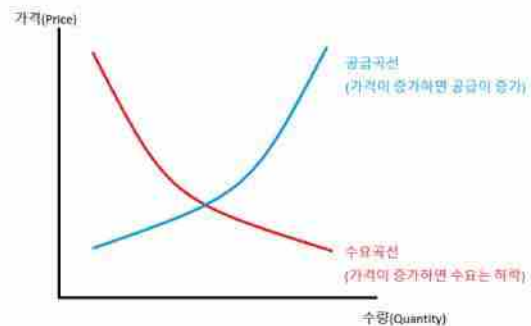
- 매우 강한 가정: 다수의 소비자, 다수의 공급자,
divisible goods, homogeneous goods



9

Part 2 | 가격 이외의 수요 · 공급 결정 요인들

- 매우 강한 가정:
다수의 소비자,
다수의 공급자,
divisible goods,
homogeneous goods



- 이질적 상품 : 아이폰, 벤틀리, FIJI · 에비앙
- 기술격차, 자연독점 : 반도체, 항공기
- 캐퍼시티, 비분할성 : 전기장비, 방산, 조선
- 규제, 신뢰도 : 의약품
- 수요독점 : 자동차 부품, HBM메모리
- 번들링 : 농산물 FTA 협정
- 환율 : 가격차별, 이윤 변동성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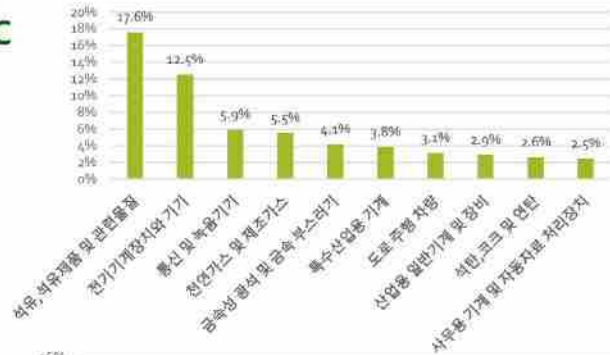
우리나라 2024년 주요 수입, 수출 품목

Part 2

• 2024년 수입 67개 SITC

중분류 품목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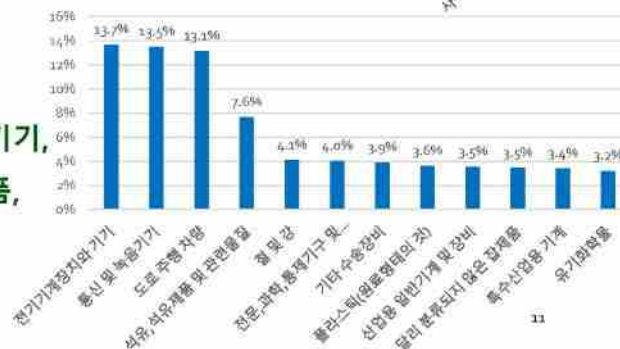
- 1위 석유(17.6%),
- 4위 천연가스(5.5%),
- 5위 금속 광석(4.1%)



• 수출 상위 12개 SITC

품목이 77.2%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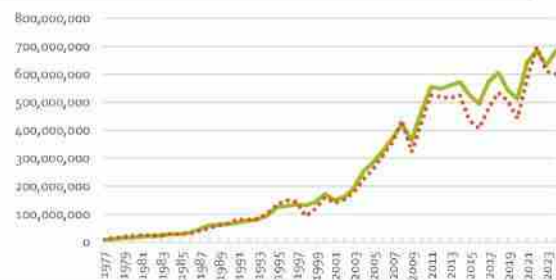
- 1위 전기기기, 2위 통신기기,
- 3위 자동차, 4위 석유제품,
- 5위 철강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의 변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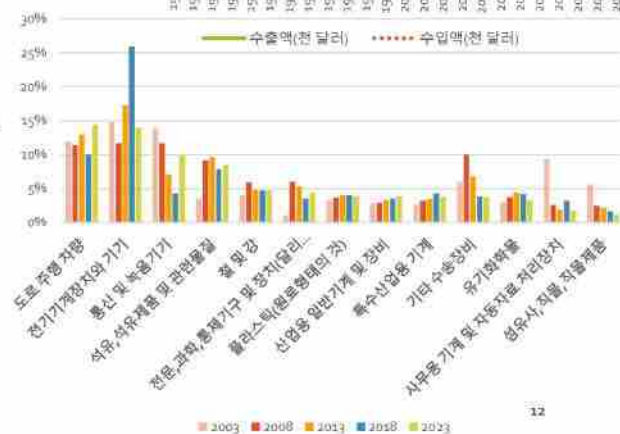
Part 2

- 2010년 이후 무역 흑자 폭 증가



- 수출 품목별 비중은 시기마다 큰 변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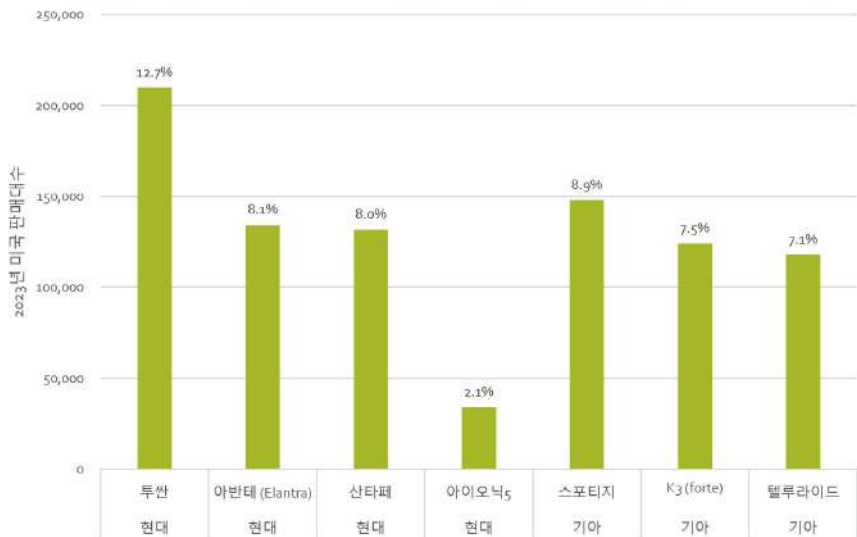
- 2003년 사무기계, 섬유
- 2008년 조선, 핸드폰
- 2013년 석유, 화학
- 2018년 반도체
- 2023년 자동차



Part 2

강달러 기간 미국에 판매된 인기 차종

- 고환율 기간 가장 대미 수출 확대폭이 컸던 품목은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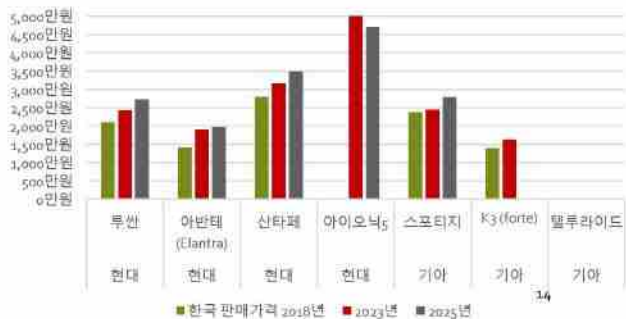


13

Part 2

미국 수출 주력 차종의 소비자 가격 상승폭

- 미국 MSRP 및 한국의 자동차 가격 증가 폭은 연 5%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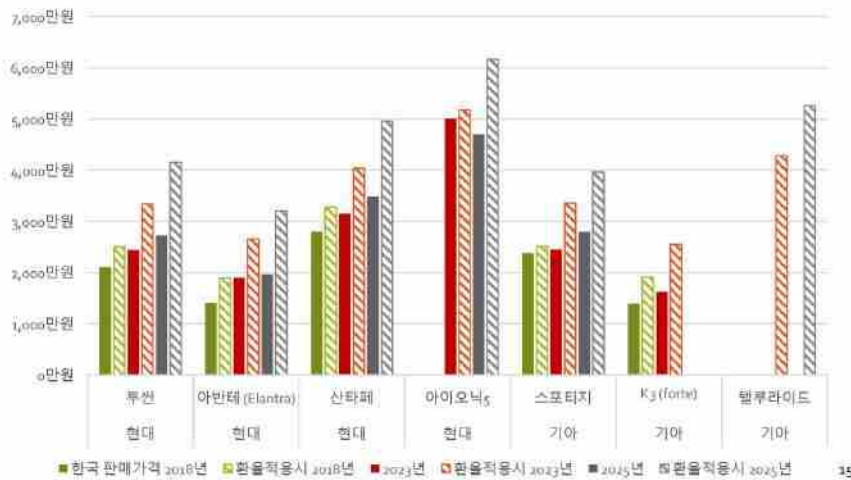


14

환율 상승으로 대미 수출 기업의 이익 제고

- 2018년 대비 23년 달러환율 22% 증가, 25년 36% 증가
- 현대기아그룹 영업이익 사상 최고 실적 (강달러로 인해
투싼 \$29,000 > 4,200만원, 싼타페 \$35,000 > 5,000만원 가치)

Pa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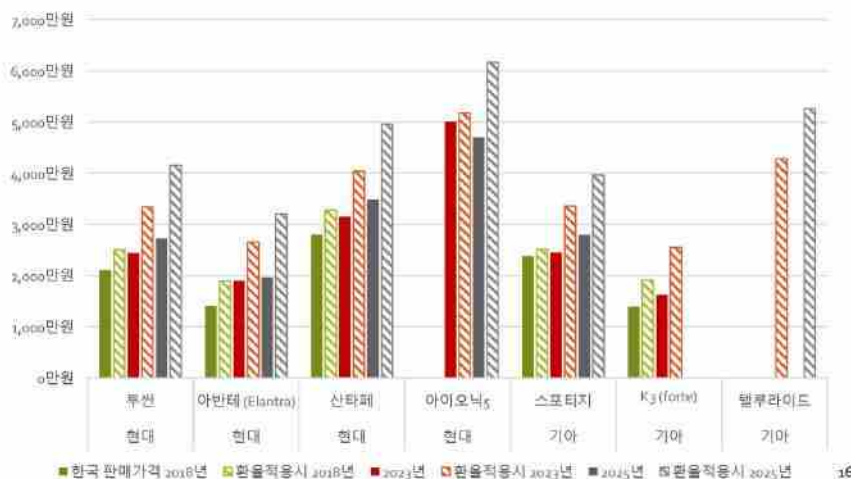


35

환율 초과 수익분을 미국 정부가 회수?

- 해외 수출기업, 유통기업이 누리던 강달러로 인한 초과수익분을
저유가 및 금융 제도 개혁을 통해 저환율 방향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관세를 부과하여 미국 정부가 가져가는게 가능할까?

Part 2



36

Part 2 저금리, 저환율, 저유가 시대가 도래한다면?

- 미국 수출 기업의 고환율로 인한 추가 이익분은 상쇄될 것
- 우리나라도 수입 물가 하락(저환율) 및 에너지 가격 하락(저유가), 대출이자 감소 및 대출 확대(저금리, 유동성증가)로,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던 소비자 및 산업에 반사이익 가능

Part 2

- 인플레이션 발생 시 근로소득이 충분히 맞춰 오르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이 존재, 단순한 부익부 빈익빈의 방향이 아님.
- 미국 인구조사국: 2023년 미국 중위소득 4% 상승하여 2019년 이후 실질소득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첫 번째 사례
- 백인 5.4% 증가하여 \$84,630, 흑인 2.8% 올라 \$56,490 이었으나, 히스패닉(\$65,540)과 아시아계(\$112,800)는 변화가 거의 없었음.

37

Part 2 성역 없는 수단, 성공 혹은 역효과?

• 트럼프 정부, 에너지 생산 확대 관련 행보

- 파리기후협정 탈퇴, 전기차 보조금 폐지, 풍력 보조금 삭감 및 건설 중단 선언
- 2025년 2월 28일 트럼프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쟁 종식이 매우 멀었다”는 발언을 비판하며 미국은 “더는 참지 않겠다”며 군사적 지원을 전면 잠정 중단, 3월 6일 우크라이나와 정보 공유 중단, 러시아 곧바로 3개 마을 점령
-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환경규제 완화, 화석연료 자원 개발 가속화, 파이프라인 건설 승인 절차 간소화
- 루이지애나 대규모 LNG 프로젝트 예비 승인, 알래스카 LNG 한미일 공동 개발

•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을 통한 미국내 직접 투자 유도

-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WTO가 미국에 불공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탈퇴할 가능성 언급
- 캐나다, 멕시코 25%, 중국 10+10% 관세: 각국 정부에 마약(펜타닐)과 불법이민에 대한 대책 촉구
- 일본, 대만, 한국 관세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유력): 기업에 대해 미국내 직접 투자 및 미국 제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책 촉구

38

미국 제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접 투자 요구

Part 3

멕시코 진출 협력기업 불안
삼성, LG, 현대, SK
직접투자 추가 여력 물음표
일본의 대대적인 투자 계획



미국 제조 일자리 이동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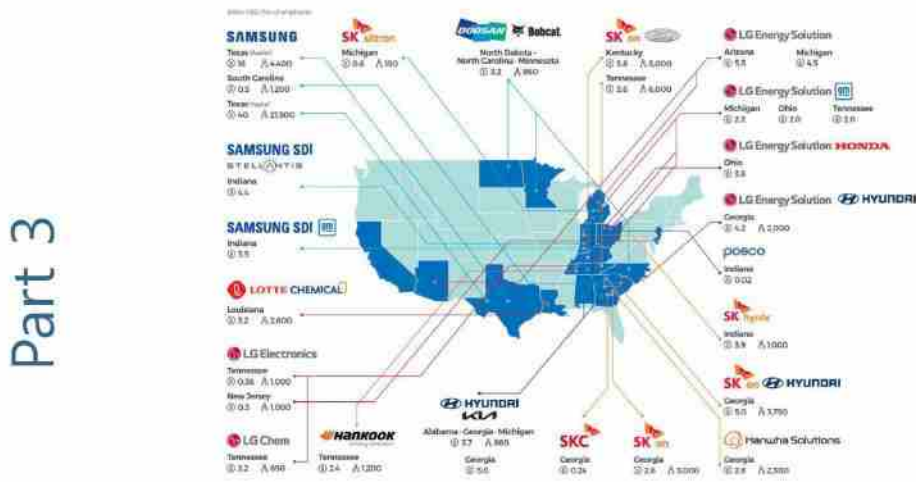
- 미국 제조설비 투자 플랜 압박 중
- 트럼프 1기에 진출한 규모의 10배 이상을 요구 중
- 멕시코 등에 진출한 대기업 및 협력 중소기업의 고민 확대
- 미국 배터리 및 소재 기업 투자의 수익실현에 대한 불확실성 고조
- 일본은 적극적인 투자 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제시

Part 3

연번	업체명	지역	생산 capa	합작사	투자기간	투자금액 (억원)	직접고용 (명)	간접고용(명)		
								전방	후방	합계
1	LG 에너지 솔루션	미시간	40GWh	각계 생산	~25(건설)	40,000	2,500	686	2,141	2,847
2		미시간	50GWh	엔티엄셀즈(GM) 3공장	~25(건설)	36,000	1,700	466	1,470	1,936
3		오하이오	40GWh	엔티엄셀즈(GM) 1공장	~22(운영)	27,000	1,300	557	1,124	1,481
4		오하이오	40GWh	현대	~25(건설)	58,000	2,200	604	1,902	2,506
5		테네시	50GWh	엔티엄셀즈(GM) 2공장	~24(운영)	27,000	1,700	466	1,470	1,936
6		조지아	30GWh	현대차그룹	~24(건설)	57,000	-	-	-	0
7		앨라배마	36GWh	각계 생산	~24(건설)	42,000	2,900	768	2,421	3,189
8	SK온	조지아	22GWh	각계 생산	~23(건설)	30,000	2,500	686	2,141	2,847
9		테네시	43GWh	포드	~25(건설)	102,000	7,500	2,058	6,484	8,542
10		켄터키	86GWh	포드	~24(건설)	65,000	2,900	549	1,729	2,278
11		조지아	35GWh	현대차	~25(건설)	65,000	2,900	549	1,729	2,278
12	삼성SDI	인디애나	67GWh	스텔란티스	~25, 27(계획)	46,000	2,900	768	2,421	3,189
13		인디애나	30GWh	GM	~27(계획)	46,000	1,600	439	1,383	1,822
총 합						661,000	30,600	8,396	26,455	34,851

협상전략: 수출 기업의 일자리 기여 강조

- 투자는 일회성이지만 고용은 지속 유지
- 이미 미국에 진출한 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기여, 경제안보 및 종합적 협상 플랜 필요



협상전략: 수출 기업의 일자리 기여 강조

- 미국 내 생산중인 우리 기업(사업체) 수는 2,498개
- 직접 고용은 총 148,163명
- 간접고용은 전방 50.6만명, 후방 17.3만명으로 추산
- 총 일자리 효과 82.7만 명
 - 직접고용은 도매업(제조본사), 자동차, 영상기기, 화학, 반도체, 과채식품, 알루미늄제품, 자동차부품, 식품소매 순으로 높음.
 - 간접고용은 도매업(제조본사), 화학, 자동차, 과채식품, 광고, 자동차부품, 영상기기 순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됨.
- 타 산업의 우리기업에서 파생된 도매업 간접고용을 우리기업 직접고용에서 전부 제외하더라도, 13.5만명 직접고용 + 50.3만명 간접고용으로 총 63.8만명의 일자리 기여

”

산업구조 및 인력수요 전환에 대한 시사점

Price & Quantity
양적 경쟁 시대의 종식

Part 4



Quality, Finance, Politics :
The Rise of Strategic Value Competition
전략적 가치 경쟁의 시대 도래

23

세부 수출에 대한 전망은 불확실성 내포

- 단기적으로도 수출의 변동성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음.
- 인력양성에는 5년 가량의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단기적 예상을 바탕으로 한 인력양성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음.
- 노동시장은 후행적, 종합적 대응이 완료된 결과값이므로, Partially significant effect 보다는 Overall effect가 중요
- 수출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인구구조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AI 로봇, 자동화, 무인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노동공급자의 가치관 변화 (Gig economy, 지역선호, 여가 중시)

Part 4

24

트럼프 불확실성 시대, 본질적 가치 추구

Part 4

- 산업구조 및 인력수요 전환에 대한 시사점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IT 혁신을 이끌 초일류 공학인재 양성 시급
 - 중숙련 인력의 양적 확보 중요성은 점차 하락
 - 인구구조 변화 및 AGI 로봇 발달도 mediocre 지식 및 육체 노동 수요를 줄이고 고임금과 저임금 일자리 양극화를 확대할 것
- 기술이 노동시장에서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우수한 소수 인력**을 대우하는 방향의 사회적 관점 변화가 필요
 - 개발자 인센티브, 유연근무, Stock option 관련 제도 합리화 등 기존의 호봉제, 근로시간, 해고 당위성 중심의 **근로기준법 개선** 필요
 - 다수의 중숙련 교육이 아닌, **소수의 엘리트 교육**을 더 강화할 필요
 -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신규 대학 졸업자가 곧바로 일할 수 있도록, **노동 생산성의 괴리**를 메워줄 부처간 업무 조정 및 새로운 모델 개발 필요

25

감사합니다

26

트럼프 2기, 대한민국 산업 정책 및 인재 정책을 그리다

발표 3

AI와의 공존을 위한 교육 전환

윤혜준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재역량연구센터)

제90차 인재개발 정책포럼: KIET·KRIVET 공동정책포럼

AI와의 공존을 위한 교육 전환

Trump's Education Agenda Questioned

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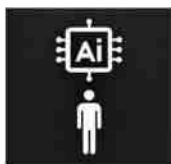
2025. 3. 25.

윤혜준 인재역량연구센터

AGENDA



1 Trump's Education Plan: 5 Keywords



2 New Landscape Reshaped by AI



3 Reimagining Education: What's Next?

2

Trump's Education Plan: Five Keywords

Dismantle Dept. of Education

연방교육부 해체

Boost School choice

학교 선택권 확대

End DEI Initiatives

DEI 프로그램 폐지

Student Loan Forgiveness

학자금 대출 탕감

The American Academy

아메리칸 아카데미

3

Trump's Education Plan

Linda McMahon "Put yourself out of a job"

- 2025년 3월 3일 트럼프 행정부 2기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으며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중소기업청(SBA) 청장 역임한바 있는 WWE 공동 창립자
- 취임사 *Our Department's Final Mission*의 핵심 키워드
Send education back to the states, School choice, Eliminate bureaucracy

"나의 비전은 대통령의 비전과 일치합니다. 교육을 각 주(州)로 돌려보내고 모든 부모가 자녀를 위해 우수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학과 K-12 학교, 학생, 교사가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제거할 것입니다."

"미국 교육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정치적 이념, 특수 이익 집단, 부당한 차별로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부는 설립된 1980년 이래로 1조 달러 이상의 예산을 운영해 왔지만, 학생들의 성과는 지속적으로 저조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미국 학생들이 실패한 학교에 갇혀 있습니다."

Source: <https://www.ed.gov/about/news/speech/secretary-mcmahon-our-departments-final-mission>

4

Trump's Education Plan

Dismantle Dept. of Education

1 연방 교육부 해체

- 대선 공약인 **연방 교육부 폐지** 방침을 구체화하며 **대대적인 인력 감축** 예고
 - 2025.3.11. 교육부 직원 1300여명 추가 해고하며 직원 수는 4,133명에서 절반으로 감소
 - 행정 명령을 통해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전, 부서 업무 전면 정비
 - 교육부는 1979년 의회에 의해 설립, 교육부 폐지는 의회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
- **교육부의 주요 기능**
 - 학자금 대출 관리: 1조 5천억 달러 규모 학자금 대출,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 감독
 - 인권 관련 업무: 교육부의 LGBTQ+ 및 유색인종 학생 보호, 교육 자원 및 징계 격차 조사를 담당
 - 대학 인증: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모든 인증 기관을 감독하며 전체 시스템을 관리
 - K-12 학교 재정지원: 저소득층 학교 및 장애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배분

Trump's Education Department changes could lead to systemic 'chaos'

Due to contracts, staff and civil rights policies might be lost, leading to less oversight and more mismanagement, education experts warn.

Retrieved March 12, 2025



Image Source: <https://www.k12dive.com/news/Donald-trump-education-department-DDGE-executive-order-fraud-abuse-waste/742093/>

5

Trump's Education Plan

Boost School Choice

2 학교 선택권 확대

- Agenda 47: 47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한 재선 공약으로 핵심은 미국 우선 주의
- 대통령의 행정조치(Presidential Actions):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필요, 목표, 가치관에 가장 적합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편적 학교 선택권을 보장

Parents want and deserve the best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But too many children do not thrive in their assigned, government-run K-12 school.

- 트럼프 대통령은 2025.1.29.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성별 이념과 차별적 형평성 이념 교육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
 - 학교 선택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우선시
 - 재량적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 자유 장려, 저소득 근로 가족을 위한 기회 확대, 군인 가족 돕기, 인디언 교육국(BIE) 학교에 해당하는 아동 지원 등 포함
 - 학교 선택 옹호자들은 교육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환영하는 반면, 교사 노조 등은 정부 기관의 재량 자금을 사립 교육에 광범위하게 전용하는 것이며, 공교육의 질을 떨어지게 할 것이라고 해당 정책 비판

Source: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expanding-educational-freedom-and-opportunity-for-families/>

6

Trump's Education Plan

End DEI Initiatives

3 DEI(다양성 · 형평성 · 포용성) 프로그램 폐지

- 트럼프 대통령은 2025.1.2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급진적이고 낭비적인 정부 DEI 프로그램 및 우대 정책 폐지"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
 - 연방 정부 내 **모든 DEI 담당 직원 해고 조치 및 관련 프로그램 폐지**
 - DEI 정책을 대체할 '실력주의(merit-based system)' 강조, 민간기업에 DEI 폐지를 권고
 - 'Project 2025'에서 요구한 연방 정부의 DEI 폐지 방안과 유사
- DEI는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과 고용에 보다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벽을 제거하는 프로그램
 - 1964년 민권법(Civil Rights Act) 제정 → 인종, 종교, 성별, 피부색,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 금지
 - 1965년 행정명령 11246호 → 연방 고용에서 차별 금지 및 적극적 우대조치 시행 의무화
 -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인력의 DEI & Accessibility 행정명령을 통해 DEI 정책 강화
 - 트럼프 행정부는 존슨 행정부의 행정명령 11246호를 철회하면서 "미국 사회의 중요한 기관들이 'DEI' 라는 미명 하에 인종 및 성별 기반 특혜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
- 교육기관의 표현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를 침해로 연방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대학과 연구 기관들은 불확실한 기준으로 자율성 훼손 우려
- DEI 폐지 조치는 연방 정부 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Walmart, Boeing 등 DEI 프로그램 축소, Amazon은 DEI, LGBTQ+ 관련 문구 삭제 등

Source: <https://time.com/7210039/what-is-dei-trump-executive-order-companies-diversity-efforts/>

7

Trump's Education Plan

Student Loan Forgiveness

4 학자금 대출 탕감 제도 수정

2024년 2월 바이든 정부의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 1965년 제정 Higher Education Act에 근거 1인당 최대 2만달러까지 소득 기준에 따라 학자금 부채 탕감
- 1만2000달러 이하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10년 이상 상환을 한 경우 남은 학자금 부채를 탕감 받음. 소득이 낮아 학자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대출자도 탕감 대상에 포함
- 2024년 12월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으로 공공 서비스 분야 종사자(경찰관, 소방관, 간호사, 교직원 등) 약 5만 5000명에 대한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발표(PSLF)하였고 지난 4년 간 총 500만명이 학자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남(총 1800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
- 바이든 전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더 많은 저소득층 가정 출신 학생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도록 교육 기회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고 강조
-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서비스 학자금 대출 탕감 회복(Restoring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행정명령을 통해 특정 조직 및 직업군의 학자금 대출 탕감 자격 제한
 - 연방 학자금 지원국(FSA)을 정부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대학 진학 기회 제한

8

Trump's Education Plan

Student Loan Forgiveness

4 학자금 대출 탕감 제도 수정

2025년 2월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서비스 학자금 대출 탕감 회복(Restoring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행정명령을 통해 특정 조직 및 직업군의 학자금 대출 탕감 자격을 제한
-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부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재무부(Treasury) 또는 중소기업청(SBA)으로 이전하는 방안 검토
- 연방 학자금 지원국(FSA)을 정부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대학 진학 기회 제한
- 주요 쟁점
 - 법적 문제: PSLF는 2007년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기반하고 있으며 501(c)(3) 비영리 단체 및 정부 기관 근로자를 PSLF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적 위반 소지
 - 사회적 영향: 공공부문 종사자의 감소 예상 (특히 교사, 간호사, 군인, 공익 변호사 등), 교육비 부담 증가로 저소득층의 대학 진학을 감소, 사회적 불평등 심화 우려
 - 경제적 불안: 연방 정부의 학자금 대출 지원 축소로 대학 재정 위기 가능성

9

Trump's Education Plan

The American Academy

5 아메리칸 아카데미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선거 캠페인의 일환으로 American Academy 제안

- “인간의 지식과 기술을 총망라하는 최고 수준의 교육 콘텐츠를 수집하여 모든 미국 시민에게 온라인으로 무료로 제공할 것”
- “아카데미는 철저히 비정치적인(non-political) 기관이 될 것이며, wokeness나 jihadism을 허용하지 않을 것” -Agenda 47 中
- 과도하게 축적된 사립대학 기금에 세금을 부과하고, 벌금을 매기며, 소송을 통해 수십억 달러를 확보
- 기존의 4년제 대학과 직접 경쟁하며, 전통적인 대학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학위 프로그램까지 운영할 예정
- 트럼프가 사립대학 기금에 대한 과세를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2017년 대통령 재임 시절, 그는 대형 사립대학 기금의 수익에 대해 1.4%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 대학 개혁을 원하는 보수층 유권자의 요구를 반영
- 아메리칸 아카데미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 우선순위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실제로 교육 전환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

<https://stanforddaily.com/2025/01/19/trump-american-academy/>

10

Education at a Crossroads

“미국 교육은 현재 또다시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다.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정치적 분열의 소용돌이 속에서 격렬한 선거 갈등과 교육의 근본적 가치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에 직면해 있다”(Douglass, 2024)

미국 교육이 직면한 도전

- 교육은 양측이 정치적 의제를 추진하는 주요한 전쟁터라 언급(Salajan & Jules, 2024)
- 트럼프주의(Trumpism)와 보수적 교육 개혁이 주요 정책 기조로 자리 잡으며, 연방 정부의 교육 개입 축소, 공립학교의 역할 변화, 그리고 학문적 자유 및 형평성 정책의 후퇴 예상
 - 연방 차원의 교육 예산 배분 변화: 저소득층, 소수자 교육 기회 감소 가능성
 - 공교육이 악화되고 사립 및 차터 스쿨(charter school) 중심으로 변화
 - 교육연구기금 축소, 연방 차원 교육 데이터 수집 감소
- 정부는 교육에 대한 책임을 점차 민간 부문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교육의 주요 기능이 시장 논리에 의해 재편(AI 교육에서도 시장 주도형 접근 강화 가능성)
- 미국식 교육 모델의 영향력 약화: 인문교육, 학생 중심 교육, 다양성 존중 등을 강점으로 한 미국식 교육 모델이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

11

New Landscape Reshaped by AI

AI는 직업 지형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 기술의 혁신은 역사를 통하여 일의 역학을 재정의하는 중요한 변화를 수반
- 과거 기술 발전이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었다면 AI는 다양한 산업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며 자연스럽게 통합
- 생성형 AI에 기반한 업무 자동화가 미래의 직업 지형 변화의 주요 요인이 될 것. 이는 AI 기술이 인간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복잡하고 인지적인 과업의 자동화 가능성을 가속화하기 때문(Hazan et al., 2024).
- 생성형 AI 없는 자동화와 비교했을 때, 생성형 AI 기반 자동화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교육·직업훈련(educator and workforce training), STEM 전문가, 창작·예술 관리(creatives and arts management) 등으로 나타남.
- 생성형 AI가 기존의 디지털 기술과 달리 단순 반복 작업에 국한되지 않고, 창의적 콘텐츠 생성, 고차원적 문제 해결과 같은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임.
- AI 기반 자동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직업으로는 보건 관련 종사자(신체적·정서적 상호작용, 복잡한 판단, 그리고 상황별 맞춤형 대응이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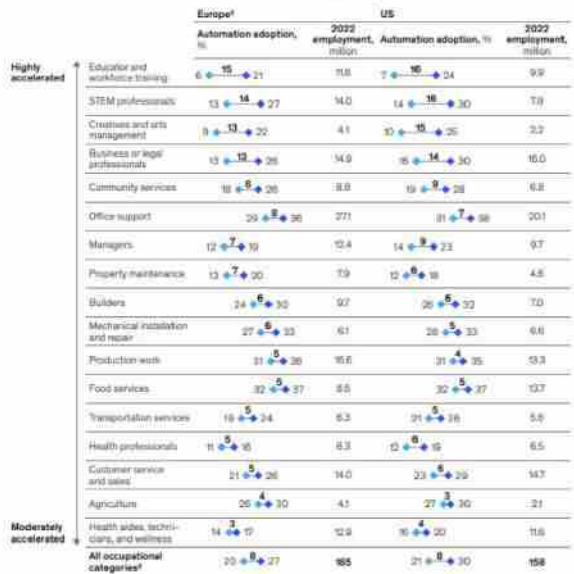
12

New Landscape Reshaped by AI

With a boost from generative AI, up to 30 percent of work hours could become automated by 2030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utomation adoption, Europe and US faster/midpoint scenario, 2030, % as a share of time spent on current work activ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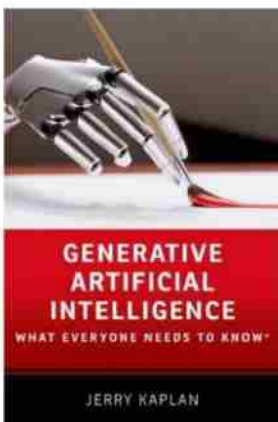
Automation adoption without generative AI, %
Automation adoption with generative AI, %
Acceleration (or automation adoption from generative AI, percentage points)



Source: Hazan, E. et al. (2024): A new future of work: The race to deploy AI and raise skills in Europe and beyond. McKinsey Global Institute.

13

New Landscape Reshaped by AI



생성형 AI는 인간의 고유성에 대한 관점을 뒤집으며
우리 사회적 구조에 극도의 압력을 가할 것이다.

-Jerry Kaplan

어떤 직업이 사라질 가능성이 클까?

사회적 업무가 아닌, 목표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잘 정의된 기능적인 업무

어떤 직업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리가 결코 자동화를 원하지 않는 다양한 직업이 존재
감각지각이나 손과 눈의 협응이 필요한 업무
개인적 기량을 발휘하는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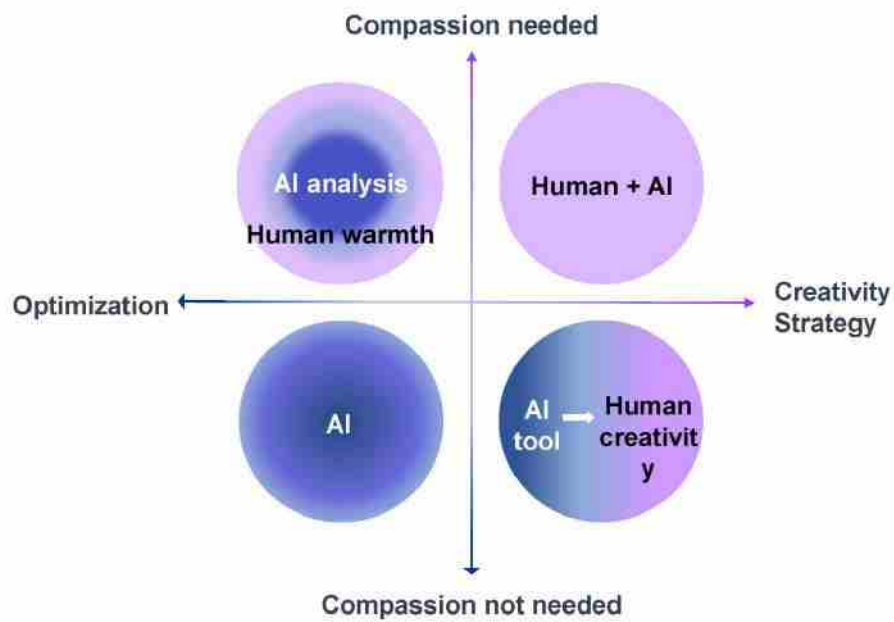
어떤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까?

Prompt Engineering, Data Wrangler, AI test & monitoring
Software engineers 등

<https://www.amazon.com/Generative-Artificial-Intelligence-Everyone-Needs/dp/0197773540>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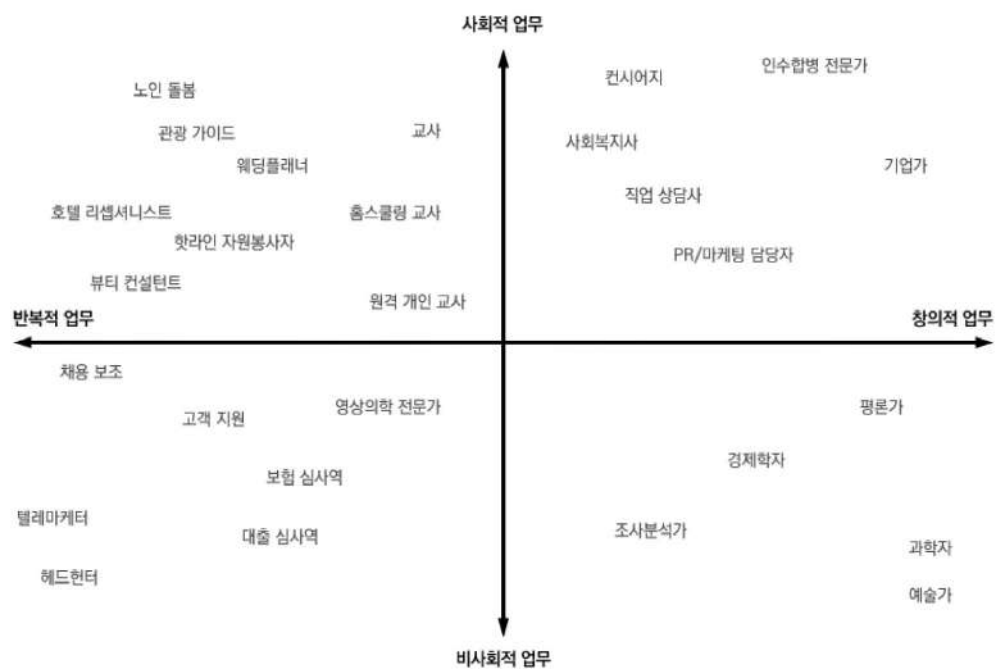
New Landscape Reshaped by AI



Source: Lee(2021). Figure(p. 265) 재구성

15

New Landscape Reshaped by AI



Source: Lee & Qiufan(2023), p. 423

16

Reimagining Education: What's Next?

교육의 우선 순위는 무엇인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공감적으로 소통하며,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 고유의 역량을 기를 기회를 제공받는 것
이를 통해 복잡하고 급변하는 세상의 문제들을
창의적이고 신중하며 공동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AI 기술의 교육적 통합에 대한 우려

- # 학습자의 주도성을 제한
- # close-ended problem 중심 학습을 강화
- # 인간적 연결과 공동체성 저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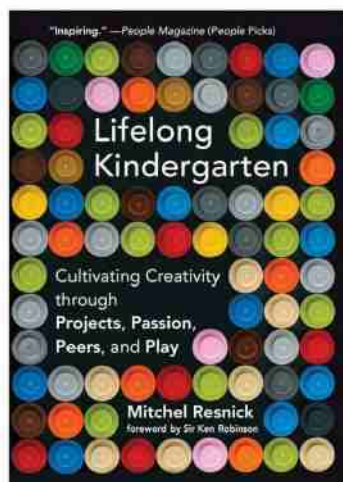
가장 중요한 교육적 기회는 학생들에게 AI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AI로 학습하도록 돕는 데서 온다

<https://www.media.mit.edu/people/mres/overview/>

17

Reimagining Education: What's Next?

Four P's by Resnick



1. Projects

학습은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직접 만들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2. Peers

학습은 사회적 활동이며,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력하며 발전한다.

3. Passion

자신이 관심 있는 프로젝트에 몰입할 때
학습 효과가 극대화된다.

4. Play

실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는 과정이
창의적 학습에 필수적이다.

<https://www.amazon.sg/Lifelong-Kindergarten-Cultivating-Creativity-Projects/dp/0262536137>

18

Reimagining Education: What's Next?

학습중심의 시대, 가르침의 의미는 무엇인가? by 박은주(2023)

- 한나 아렌트의 <교육의 위기>가 쓰였던 1958년의 상황이 오늘날에도 되풀이
 -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아무런 철학 없이 정반대의 정책과 노선의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
 - 교육의 위기를 진보주의 대한 반발로 이루어진 보수주의로의 회귀와 관련
 - 부작용이 드러난다면 다시 진보주의로 회귀하며 교육은 황폐화
- 한나 아렌트, ‘고립된 자아’에서 ‘연결된 존재’를 향하여(p. 246)
 - “교육은 반드시 가르침과 동시에 일어난다”
 - “교육은 개인의 고립된 내면에서 빠져나와서 공동세계와 타인들의 세계에 연결된 존재로 자라가는 과정”

19

Reimagining Education: What's Next?



Can Robots Replace Teachers?

Will Robots Replace Teachers?

Should Robots Replace Teachers?

AI가 인간 교사보다 더 나은지 아닌지를 논쟁하는 문제가 아니다.
미래 사회를 위해 우리가 원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정치와 얽혀 있다
(Selwyn, 2019)

Image <https://www.amazon.com/Should-Robots-Replace-Teachers-Education/dp/1509528962>

20

References

박은주(2023). *한나 아렌트, 교육의 위기를 말하다: 학습중심의 시대, 가르침의 의미는 무엇인가?*

Douglass, J.A.(2024). Universities Can Expect a Frontal Attack if Trump Returns.University World News, <https://www.universityworldnews.com/post.php?story=20241029144810388>.

Salajan, F.D., & Jules, T.D.(2024). US Education in the Age of Trumpism, Project 2025, American Isolationism, and the Global Polycrisis: Charting a New Role for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ducation,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68:4, 519-537.

Lee, K.-F.(2021). A human blueprint for AI coexistence. In von Braun, J., S. Archer, M., Reichberg, G.M., Sánchez Sorondo, M.(eds), *Robotics, AI, and Humanity*. 261-269. Springer.

Lee, K.-F., & Qiufan, C.(2023). *AI 2041: Ten visions for our future*.

Resnick, Mitchel(2017). Give P's a chance: Projects, peers, passion, play.

Selwynm, N.(2019). Should Robots Replace Teachers?

<https://www.ed.gov/about/news/speech/secretary-mcmahon-our-departments-final-mission>

<https://www.ed.gov/about/news/speech/secretary-mcmahon-our-departments-final-mission>

<https://time.com/7210039/what-is-dei-trump-executive-order-companies-diversity-efforts/>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expanding-educational-freedom-and-opportunity-for-families/>

트럼프 2기, 대한민국 산업 정책 및 인재 정책을 그리다

발표 4

트럼프 2기, 노동시장 및 인재정책 대응 전략

김철희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고용능력연구본부)

트럼프 2기, 노동시장 및 인재정책 대응 전략

2025. 3. 25

김철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트럼프 2기, 대한민국 산업 변화 및 인재정책 대응을 고찰하다

순서

트럼프 2기의 교육 및 노동시장 정책

미국, 한국 노동시장, 인재정책 현황

트럼프 2기 대응, 한국의 인재양성 프로그램

대응 전략

트럼프 2기, 교육정책

교육부 해체
연방 정부의 교육 개입 축소
주 정부의 권한 강화

학교선택권 확대
LGBTQ+ 교육 제한
애국적 가치 중시

직업기술교육 및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양당의 지지를 받는 영역으로
관련 예산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

주 정부의 교육통제권 강화

연방 재정 지원 축소
블록 보조금 형식 지원

주 정부의 교육예산 자율 운영

저소득층, 장애인 학생 지원
축소 무려

저소득층 학생, 영유아 지원
프로그램 단계적 폐지

취약계층 교육기회 제한,
교육불평등 심화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
공립 → 사립 자금 이전
(바우처 프로그램)

보편적 학교선택권,
홀 스쿨링 장려



무역정책 대변혁(Tariffs)

리스크 감수(Risk-taking)

불확실성 확대(Unpredictability)

제조업 강국(Manufacturing)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 도모

기대와 우려(Parad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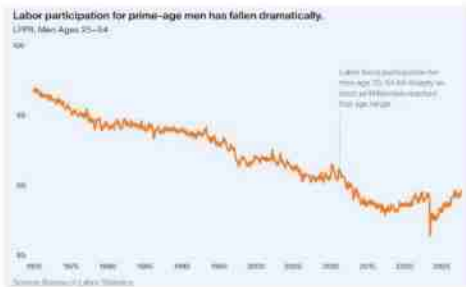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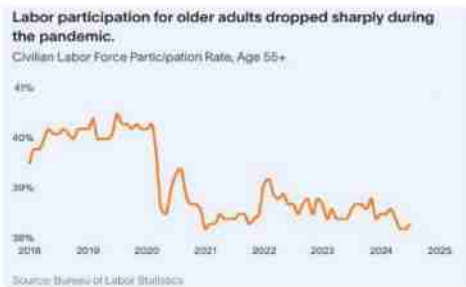
- 삼정PMG 경제연구원(2024) -

트럼프 2기, 노동시장 정책

미국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

미국 내 구인 건수 800만, 구직자 수 680만(2024, U.S. Chamber of Commerce)
상당수 일자리가 채워지지 않음을 의미, 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경제성장 둔화 등 초래 가능성

노동력 부족 만성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가 조기 은퇴로 더욱 악화(2021년 기준, 300만명 장년층 조기 은퇴, Bloomberg)
밀레니얼 세대 및 핵심 노동인구(남성)의 경제활동 참여 감소
주요 산업 기술 노동자 부족(2030년까지 10만 명 인력 부족 전망,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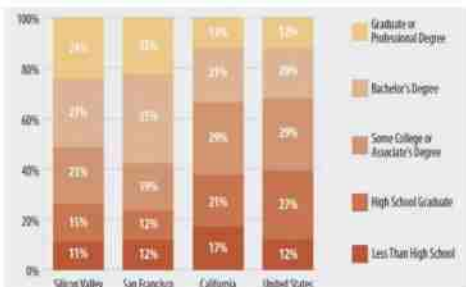


미국 인재정책의 현황

트럼프 행정부 정부효율부(DOGE) Elon Reeve Musk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미국에는 재능이 뛰어나면서 의욕이 넘치는 훌륭한 엔지니어가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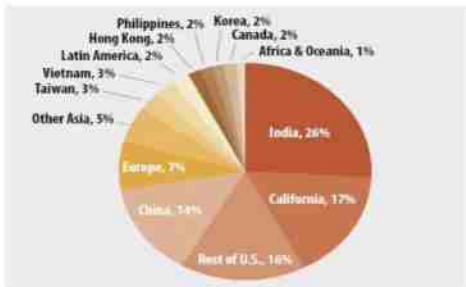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인공지능(AI) 수석정책고문 Sriram Krishnan
"인재 확보를 위해 고급 두뇌들의 영주권 발급 상한선을 없애야 한다. 외국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실리콘밸리의 교육수준별 분포



자료: United States Census Bureau, American Community Survey

실리콘밸리 학사학위 이상 출신지 분포





지속 투자 & 우호 관계 유지

반도체, 자동차 등 대미 투자 확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통한 혜택 지속
핵심인력 양성 등 국내 자원 여건 강화

시장 다변화 & 경제협력 확대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경제협력체 가입
및 적극 활동
주요 교역국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

생산성 향상 & 잠재 인력 활용

역량개발을 통한 생산성 증대
글로벌 우수 인재 확보(영입)
여성, 외국인력 등 활용

트럼프 2기,
기업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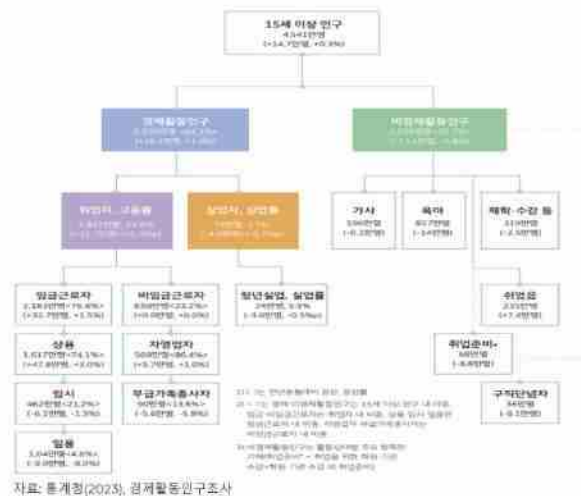
고용동향

한국 노동시장 동향

높은 임시, 일용직 및 자영업자 비중

"쉬었음" 청년 다수는 직장경험이 있고(75%),
구직의사도 보유(65%), 쉬었음 기간도 1년 미
만이 절반 이상(56%) 이나 장기 쉬었음 비중
도 증가하는 추세(2018 36% → 2023 44%)
* 관계부처 합동(2023),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쉬었음 증가 원인은 구조적, 단기 요인이 복
합적으로 작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수시·경력채용 확대로 관습은
일자리 기회 축소, 희망·일자리 취업 실패 시 구직연
장, 쉬었음 선택



한국 인재양성 프로그램 (직업교육)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전환 가속에 따라 한국의 직업교육 변곡점
산업현장 수요와 학교교육의 불일치, 취업을 하라

전문기술 인재 양성 위해 산업계 주도형 직업교육 확대, 고교-대학 간 연계성 향상, 경력관리 및 맞춤형 교육 제공 필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지원 프로그램

고졸 취업지원 정책

- 직업계고 진학奨學
- 고교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 현장실습 기술훈련 교육 지원

취업정보

- HIFIVE 취업정보
- 고용24 취업정보
- KIB 취업지원정보
- HMC 어드벤처 취업정보

직업정보

- 진로탐색프로그램
- 직업기초능력평가

자료: www.hifive.go.kr

중등교육정책지원

현장 직무훈련 교육과정

산업실제형 두레학교

특성화고

직업계고 직업계

고졸취업교육 강화

취업계고 및 고졸취업교육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지원 정책 사업

직업교육 혁신지구

국립한국직업교육진흥원

KICS 기반 교육과정 지원 및 HISMART

사회 안전보 확보(중립적 지원) 사업

전문대학 지원 공모사업 (교육부 지원)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산업연합형 선도전문대학 특성사업(NC 3.0)

고용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LIFE)사업

포기취업형 대학학과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 지원 사업

산업활용형 단기 직무능력향상 배치업(Katchup)사업

자료: www.koced.or.kr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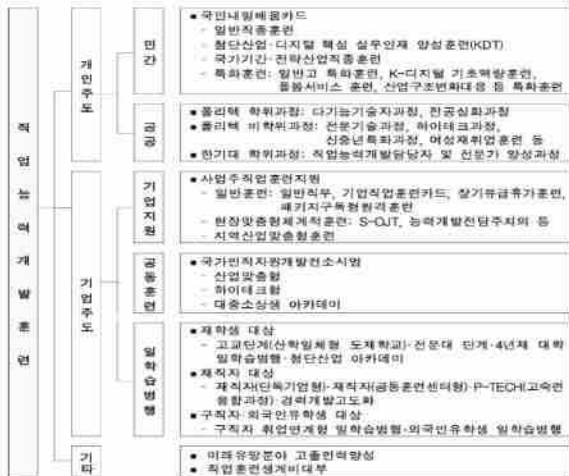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기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직무기초능력 포함)을 습득, 향
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2023년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은
3,970천 명 참여, 18,328억 원 집행

고용보험료(근로자 월 평균보수*사업별 보험료율)
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장규모별로
0.25~0.85%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 실업급여는
1.8%를 노사가 각각 50% 부담

대내외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체계로의 전환 모색

직업능력개발훈련 체계



자료: 고용노동부(2024),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한국 인재양성 현황 (직업훈련)

훈련유형별 연령별 직업훈련 참여 비중은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과 내일배움카드제 모두 20~29세 비중이 가장 높음
내일배움카드제 참여자 중 40대, 50대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은 정보통신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내일배움카드제는 보건의료(돌봄서비스)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훈련유형별 연령별 직업훈련



자료: HRD-net EIS, 고용노동부(2023),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주요 직종별 훈련 실시 인원



(단위: 만 명)

대응 가능 프로그램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산업구조 변화, 고용 위기 등에 따라 어려움이 있는 산업 분야의 재직자, 실업자 등의 노동이동 및 고용유지 등 활성화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 주도, 고용센터,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등 역할 분담



고용 현황 자료(통계청, 고용센터 등), 인력 및 훈련수요 조사 등 종합 활용하여 고용유지, 이·전직 등 직업훈련이 필요한 산업·직종 선정

훈련과정
2023 875개 + 2024 1,317개 과정
실시인원
2023년 18,111명 + 2024 19,573명

지원 범위를 국내 및 글로벌로 확대하여 변화 대응력 강화



유관 부처 주요 업무추진 계획 (2025년)

교육부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교육·실현

비전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실현
목표	모두를 위한 맞춤형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
교육 분야	인재양성
국가책임 교육 실현	① 교육격차 해소 ② 교육격차 해소 ③ 교육격차 해소
교육 현장의 다양한 변화	① 교육격차 해소 ② 교육격차 해소 ③ 교육격차 해소
자발적 국가발전 위한 노력	① 교육격차 해소 ② 교육격차 해소 ③ 교육격차 해소

고용노동부 청년과 노동약자를 위한 따뜻한 노동현장

목표	일자리 민생안정, 따뜻하고 안전한 노동현장
일자리 안정성 확보	① 청년고용 확대 ② 청년고용 확대 ③ 청년고용 확대
대기업 맞춤형 서비스 강화	① 청년고용 확대 ② 청년고용 확대 ③ 청년고용 확대
미취업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	① 청년고용 확대 ② 청년고용 확대 ③ 청년고용 확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	① 청년고용 확대 ② 청년고용 확대 ③ 청년고용 확대

글로벌 환경 변화와 노동시장 대응

산업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는 노동혁신

핵심산업 인력양성과
연계한 교육훈련

세대 상생형 유연안정성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숙련직 활용을 위한 계속고용 확대
이공계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촉진
청년실업 해소
유학생, 숙련가능인력 등 외국인력 활용

유연성 확보 정책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임금체계 개편

안정성 정책

핵심산업 분야별 노동이동 지원
일·가정 양립 강화

교육훈련의 유연성

교육기관 정책

대학개혁
기업대학 설립·운영 지원
산업별 전문 교육기관 설립·운영 지원
지역별 산학연관 협력체계 고도화

교육과정 정책

디지털교육 혁신
첨단기술 분야 혁신인재 양성 교육과정 개발
평생교육과 재교육 효율화

자료: 김철희 외(2024), 글로벌 환경 변화와 노동시장 대응 전략, 국민경제자문회의

한미 FTA 영향

경쟁적 자유화(Competitive liberalization, 2기 부시 행정부 통상기조)는 교역대상국과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FTA를 이용해 협상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교역국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협상국을 압박하는 전략**의 일종 +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에 한미FTA 포함 가능성, 한미FTA 개정** 고려

(참고) 한미 FTA 체결에 대한 국내 직업훈련시장 대응 방안

구조조정 예상 분야 직업훈련 강화

한미 FTA에 따라 기계, 화학, 금속, 전기전자 분야 구조조정으로 실업자 발생 전망(CGE 모형 활용, FTA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결과)

해외 진출 훈련기관 지원 강화

한국 직업훈련 분야의 발전 계기로 활용, 경쟁력 있는 훈련기관 해외 진출 및 프로그램 판매(주 정부 법령에 따른 협정문의 독자 적용)

외국 훈련기관 국내 진출 대응

국내 진출 예로 예상되나 국내 훈련기관과 동일한 조건 구비 시 대응 필요(정부지원 교육 훈련 서비스는 학용 대상에서 제외)

훈련과정, 방법 등 비교우위 분야 지원

위협이 예상 훈련 분야로 정보통신, 금융보험, 서비스 등, 경쟁력 있는 훈련 분야는 공예, 전기, 금속, 산업응용, 건설, 운수장비제조 등

신속 정확한 인력 및 훈련수요 전망

FTA 체결 국가와의 산업, 직업별 영향 정도 파악하여 훈련수요에 반영, 신속한 정책 지원을 통한 일할한 FTA 대응

직업능력개발 체계 재구축

FTA로 인한 숙련 노동력에 대한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기업 참여, 개인주도의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자료: 김철희 외(2006), FTA가 직업훈련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고용노동부

대응 전략

	현상	대응
노동시장	주요 기업의 미국 내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국내 일자리 창출 영향	생산성 향상을 통한 효율성 증대, 양질의 일자리 확대
	관세 등 기업 대응과 연계한 고용 및 고용서비스 정책 지원	고용노동 분야에서의 안정적 기업활동 지원
	미국의 제조업 중심(강화)의 산업정책으로 해외취업 기회 확대	교역 등 증가로 인한 국내 및 해외 일자리 기회로 연계
인재양성	우수 인재의 글로벌 시장 진출(실리콘밸리 등) 및 첨단 기술 습득 기회 축소	우수 인재의 국내 자체 양성 및 활용 기회 확대
	직업기술교육,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등 지원 강화	제도 정책 우수 사례 분석 및 활용, 연계 협력
	현지에서 필요한(대학 및 기업) 숙련인력 양성 및 활용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양성과 숙련수요 제공 (구직자, 재직자) → 특화과정 운영 지원

T H A N K S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blue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blue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blue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blue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illegible]